

1998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27	29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투쟁백서

민  
간  
위  
탁  
반  
대  
한  
다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5번지 국립목포결핵병원 ☎ 0631)280-1266

서울투쟁본부 ☎ 017-276-2109



# 민간위탁 반대한다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투쟁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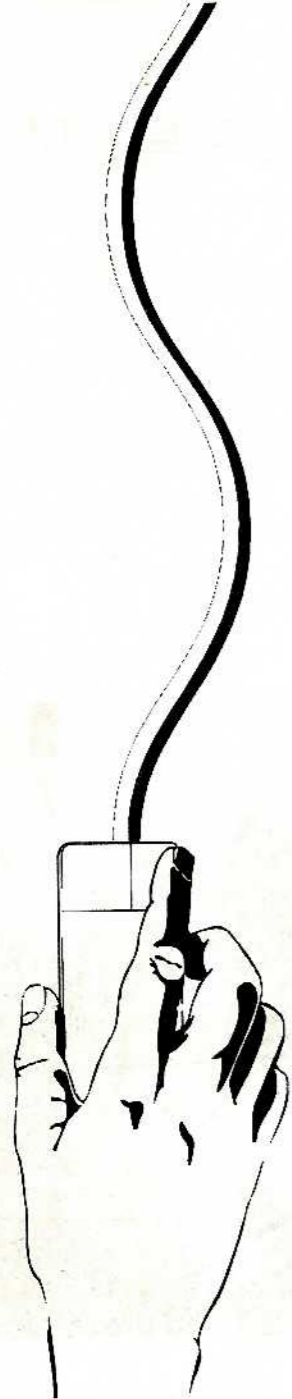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5번지 국립목포결핵병원 ☎ 0631)280-1266

서울투쟁본부 ☎ 017-276-2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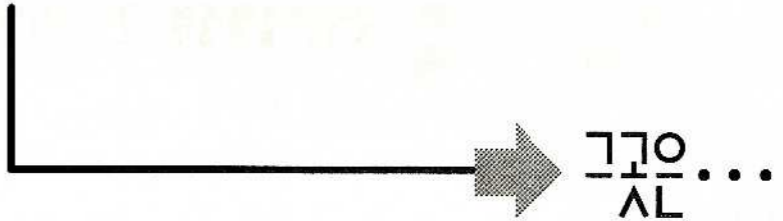
# 글심는 순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  
대투쟁 백서발간에 큰 힘을  
보태준 전남대의대, 간호대학  
생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서를 발간하며	4
배상훈 (비대위 위원장)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7
김창보 (서울보건의료청년회 회장)	
국립복지의 상실	9
김용익 (서울의대 의료관리교실 교수)	
공대위의 입장	12
민간위탁반대투쟁일지	19
국립목포결핵병원 투쟁평가서	50
김재광 (민중의료연합 사무국장)	
성명서 모음	55
자료모음	70

# 국립목포결핵병원, 국립목포결핵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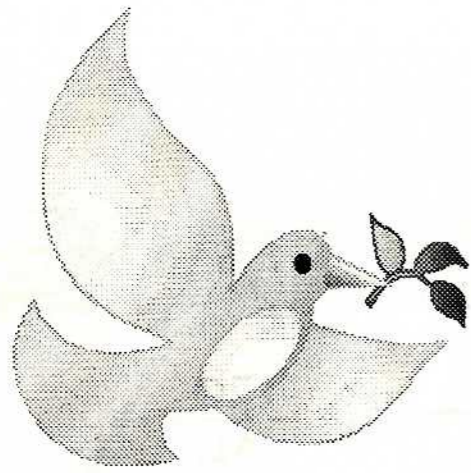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결핵관리를 국가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처음에는 사설 병원이었으나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결핵환자 치료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경제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1970년 4월 1일 목포아동결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 기관인 "목포결핵병원"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결핵퇴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83년 1월 1일 국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국립 전염병 치료시설로 흡수하여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확대개편하고 1990년 10월 20일 병원현대화 계획에 따라 대지 2만여 평에 연건평 3,303평, 360병상규모 신축병원으로 준공(대통령 공약사업)되어 의료인력 57명, 기타행정지원 33명으로 구성된 결핵전문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연 인원 7만여 명의 호남지역 및 도서벽지 결핵환자의 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3대 결핵병원(공주, 목포, 마산)중 1997년 공주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전환과 동시에 폐쇄됨에 따라 현재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우리 나라 서부권(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국가기관 병원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국립목포결핵병원에는 초치료 실패 환자(7개월 - 9개월)와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2차 치료 18개월, 난치 경우 18개월 이상)등이 입원해 있고 호남권환자들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 목포 결핵병원 전경





## 백서를 발간하며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배상훈

‘민간위탁철회 승리’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석현동 병실에서 짧은 호흡을 끝으로 돌아가신 환자여러분과 투병중에도 비대위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목포결핵병원 환자동지들에게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투쟁 백서를드립니다.

김대중 정권의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대한 반격 투쟁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민중건강권 쟁취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공대위가 백서를 발간합니다.

실업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남한의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야한다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일자리를 찾아 공단으로, 마찌고바로 수위실을 기웃거리지만 400만 실업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또한 서슬 퍼런 구조조정의 칼날에 고개숙인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리해고 앞에서 투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고,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이 자본에 의해 임의대로 재조정되어도 많은 노동자가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대중정부가 친 자본,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를 통치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 앞으로 실업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자본진영 역시 정리해고라는 적극적인 방법과 분사(分社)제도, 명예퇴직, 안식년제, 축탁제등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를 죄여들어 올 것입니다.

IMF를 몰고 온 재정경제원과 독점재벌에 대해 손도 데지 못한 채 출발한 김대중정권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했던 아이돌반지로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했던 노동자 민중을 정리해고와 퇴출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의료보장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정도로 우리 나라에는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몸이 아파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훌륭한 상품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정입니다.

다. 그러나 보건의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우편, 국가방위, 사법, 교육등과 같이 공공의 문제로 바라보고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경제 운운’하는 현재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보장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지불능력과는 상관없이 의료혜택이 모두에게 이용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가 인구의 건강과 능력을 유지하기위해 필요로 하는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단지 국가 주도의 서비스 공급만이 이러한 두가지 기준을 충족시킨다. 또한 이는 아마도 필수서비스를 공급할 가장 저렴한 방법일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린 하워드 존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 공공의료강화와 민중건강권은 절대적인 요구 사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인 실업노동자에게 있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유지는 달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매우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실업자의 구제를 주장하면서 실업을 유발시키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생색내는 정책(일자리 확대제공,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조기확충, 구조조정 이후를 대비한 직업교육, 부문별실업대책 강화)을 쏟아내지만 정작 중요한 건강하게, 질병에서 벗어나 노동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중건강권에 대한 의료문제와 실업대책에 대한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국가주도사업으로 만들었던 공공의료기관을 민영화, 민간위탁 시켜 공공성과 사회복지기능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이 말하는 민간위탁의 당위는 채산성과 인원감축입니다.

어느정권, 어느시대에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목적이, 전염병치료예방사업이 이윤추구였던 사례가 있거나 한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현재 250여일 간 명동성당과 서울대의대에 농성장을 꾸리고 민간위탁반대 투쟁하고 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은 법정 3종 전염병을 치료, 예방하는 특수목적병원임을 감안할 때 김대중정부아래서는 민중건강권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50년 철가방으로 불리는 공무원사회의 무사안일이 문제가 되어 효율성이 없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국가전염병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가 결핵발병율, 사망률등 결핵에 관한한 세계적인 결핵왕국으로 불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단지 효율성을 빙자해서 결핵관리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세계적인 망신거리입니다.

비대하고 공동화된 공무원사회를 재편해 그래서 남은 자본과 인원을 사회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었을때만이 올바른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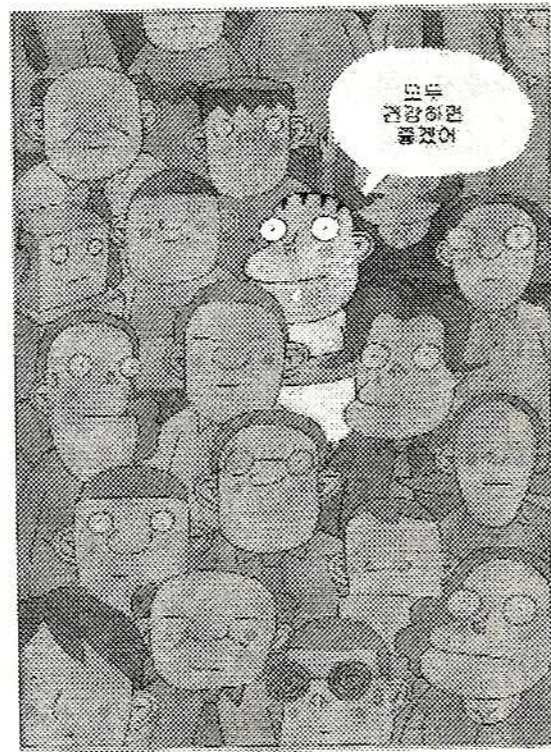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벌이에 이용하는 국민정부는 허구이며 그들이 하고자하는 제2의 건국이 43만 결핵환자와 400실업자의 학살로 구축되는 피의 건국이라면 저항하고 연대하여 투쟁할것입니다 학살자를 심판하는 몫이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면 그 선봉에 국립목포결핵병원 비대위가 앞장서겠습니다.

백서를 내면서 투쟁을 들여다보는 것은 투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보건소)민영화반대투쟁에 우리의 투쟁과정이 공개되면서 다른보건의료 동지들이 투쟁을 조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투쟁이 전국화되고 250여일간 끊기지 않는 생명력으로 투쟁할수 있었던 요인이 헌신적인 지원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대 의대학생동지들로부터 전해받은 투쟁기금으로 새벽녘 목포결핵병원을 빠져나와 명동성당농성투쟁을 전개하면서 서울투본으로서의 역할을 해낼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목포YMCA, 목포환경운동연합, 청년진보당 목포신안(갑)지구당,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 광주전남학생모임, 광주지역보건의학계열 학생협의회, 경인지역의과대학생협의회, 경인지역간호학과학생회 대표자협의회, 건강세상을 향한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생회, 청년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천새날청년회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김창보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장,  
서울보건의료청년회 회장)

서울로 올라온지 벌써 다섯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짧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가면 잘해서 반드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막아달라는 환자들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지역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 그들은 아마도 처절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환자의 몸으로 결핵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의료기관이 민간위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상황은 그들에게 더욱 강한 각오를 다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민중의 건강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위탁되는 것을 반대하고, 국가 결핵정책의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강화를 주장하며 그들의 투쟁에 동참했던 진보적인 보건의료계열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반대를 알리는 선전물을 받아 들며 이런 싸움은 꼭 필요하다고 격려해주시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반대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으며, 우리 모두의 투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경투쟁의 일정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의 정당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어 갔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와 국민회의, 자민련, 그리고 국무총리실까지 설득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투쟁의 승리가 곧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갑자기 거대한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정개위)가 해산되고 나서 이 잘못된 결정을 그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위원회, 국민회의, 자민련 모두 말로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있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국회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는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는 제쳐둔 채 추잡한 정치싸움으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예산은 민간위탁 방침 아래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설정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자세와 정치권의 추잡한 놀음으로 국회가 미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힘을 모아 투쟁할 것입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이 철회되고 국가 결핵정책이 반듯이 놓여지는 승리를 안아오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보다 더 힘을 내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이 절대로 관철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 끝내 승리를 안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을 담아 발간하는 이 백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끝내 승리를 안아오야 말겠다는 결의와 다시는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이 검토조차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환자의 몸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투쟁을 시작했던 목포결핵병원 입원 환자들의 뜻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도 이 백서 발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동참했거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5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서울에서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훈이형과 용호가 늘 건강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이 철회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 '국민 복지'의 상실

김 용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1998년 9월 29일

작년 말 우리 나라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이후 온 국민의 삶이 고통받고 있다. 노숙자의 급증, 생계형 범죄의 증가, 빈곤과 실직을 비관한 자살, 가정파탄 등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 국민 생활의 일부 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18일 발표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은 '국민 복지'가 상실된 우리 나라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사건인 동시에 우리 나라 국민들이 처한 엄혹한 삶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였다.

1960년대 초 결핵관리를 국가사업으로 채택한 이후 결핵환자의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43만 여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며 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4천 여명에 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면 위생상태가 불량해지고 이에 따라 각종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1993년에서 1994년에 걸쳐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한 대한결핵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결핵의 치료미완율이 3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입원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에서 단시일 내에 결핵관리 실태가 현격하게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입원요양시설을 비롯한 결핵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결핵은 주로 저소득계층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질병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 입원환자들의 45%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저소득 저학력의 국민층이거나 행려환자로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들이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현실에서는, 이들 취약계층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개인의 문제로 돌려져 버린다면 이들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생존 자체가 문제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는



일반 재화와는 다른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 때 그와 관계 없는 타인에 대하여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의사결정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에 근접한 다른 주민들에게 전염을 시킴으로써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전염병, 특히 사회적 빈곤으로부터 비롯되는 결핵과 같은 질병들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적 공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월 18일 발표된 정부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의 문제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경쟁과 효율의 논리에 입각한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문제를 굳이 국가와 사회가 짊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위험한 생각이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에 잇따른 공공의료기관들의 민간위탁 및 기능축소 방침에 녹아들어 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식'과 '복지 의식'의 실종을 의미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둘째는 문제해결의 방식이 문제다. 어떤 조직이 부정적인 측면(이들테면 국립목포결핵병원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조직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사회적 약자의 보호, 정부의 공공성 실현)은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의 순리이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해결방식은 이런 순리에 전혀 역행하고 있다. 즉 조직의 부정적인 일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조직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대책 없이 사장시켜버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없음과 무원칙성이다. 1997년 보건복지백서에서는 국립결핵병원의 운영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우리 나라 결핵의 실태가 급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결핵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민간위탁과 기능 감축으로 돌변했다. 이 같은 정책적 변화와 국립목포결핵병원이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된 근거는 정부재정이 악화되었고 따라서 재정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이 이처럼 일관성과 원칙 없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은 누구든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다. 넷째는 결핵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문제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진료비의 인상과 진료수익에 따른 진료과목 편성, 그리고 기존 결핵관리사업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존 결핵병원 이외에 다른 민간의료기관의 활용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료보호환자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냉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한 극빈층 중증결핵환자들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하려면 별도의 시설 마련과 유지가 필요한데 과연 어느 민간의료기관에서 이윤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불투명한 결핵관리 및 치료사업을 선택 떠맡겠는가?

정부는 재산성 혹은 경제적 수익성이라는 미시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거시적 효율성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잇따른 공공의료기관들의 민간위탁 및 기능감축은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든다고 하겠지만 전체 사회적 부담은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건강한 삶의 박탈을 전제로 한 미시적 효율성의 제고는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상수, 중수, 하수(上手, 中手, 下手) 중에서 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화근의 씨앗이 된다.

정부는 IMF 금융구제 초기에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던 멕시코의 선례를 주목해야 한다. 멕시코는 IMF 구제금융 이후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해 경제지표 상으로는 빠른 시일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멕시코 국민들은 멕시코의 '아프리카화'라고 불릴 정도로 극도의 궁핍상태에서 고통받게 되었다. 1994년 12월에서 1997년 8월까지 176.7%의 살인적인 물가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임금은 겨우 35.5%만 상승했다. 또한 전체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의존해 살아감으로써 그 결과 전체 인구의 1/3은 기본식료품을 사기에도 불충분한 극도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질 실업률이 최저 25%에서 최고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겉보기 경제지표는 살리면서 속알맹이인 국민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병약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건강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장받는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 같은 민간중심적 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국민 건강의 누수지점을 메워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 공공의료기관들이었다. 즉 애초부터 공공의료기관들은 이윤 확보 내지는 경제적 재산성을 기준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조직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들이 응당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원인과 공공의료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내려진 방침은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무정부성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의 정부'는 알아야 한다.



# 고대위 입장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 위탁 발표 경위와 문제제기의 배경

- ▶ '98. 2. 18. 신정부의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기구와 인력축소를 기하고자 단행되었습니다.
- ▶ 국가 기능의 민영화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을 추구한 듯 합니다.
- ▶ 우리 나라 결핵실태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국가보건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 ▶ 국가보건복지 차원의 사업인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병원의 재산성 차원에서 고려하여 적자만 쌓이는 효과 없는 국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국가 결핵관리체계에서의 역할 불확실로 인해 국립결핵병원의 저소득환자에 대한 구호 기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의 현실적인 실태

국립목포결핵병원은 3종 전염병인 결핵을 완전 퇴치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 결핵은 주로 저소득계층에서 발생하는 후진국 병으로 목포결핵병원의 경우 생활환경이 열악한 인근

도서 지역을 끼고 있어 결핵전문병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실제로 도서지역의 결핵 발생률이 높아 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51%가 인근 도서지역 출신이며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낙후된 전남, 전북 출신환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극빈 계층으로 월 50여 만원의 민간 병원의 진료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 내용과는 관계없이 지난 85년 이후 1일 330원이라는 저렴한 진료비를 징수하는 까닭에 한달 본인부담금액이 1만원이 되지 않아 사실상 무료 진료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게다가 입원환자는 식비는 물론 환의, 방한복, 치약, 치솔, 수건, 비누 등 환자들이 입원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환자의 경우 환자부침인을 고용하고 행려 환자의 경우 사망환자 장례비를 제공하는 등 수익성과는 취지가 다른 결핵환자 진료사업뿐 아니라 구호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실상 사회복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복 수 있습니다.

- 민간병원 수준으로 진료비 징수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저소득계층의 결핵치료가 방지될 우려가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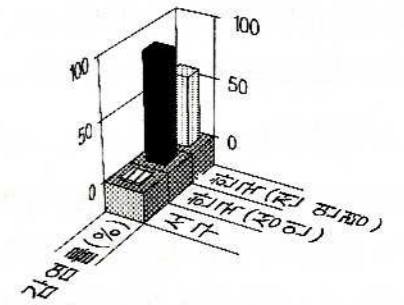
## 방지되는 결핵, 확산되는 결핵

### □ 결핵 환자 수 및 유병률 문제

결핵환자가 노동생산층(20대-50대)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환자수도 43만 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결핵 유병률 역시 1.0%로 결핵 환자 수 및 유병률에 있어 선진국 또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결핵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 결핵 유병률 : 일본(0.06), 싱가포르(0.8), 중국(0.5))

이와 같이 결핵은 현재 10대 사망 원인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도내 7만여 명의 환자 중 매년 결핵으로 4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어 국가의 중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 공주 결핵병원 기능전환에 따른 결핵수용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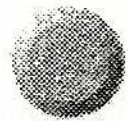


## 력 부족

공주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전환함으로써 그동안 공주에서 수용하던 서울, 경기, 충남, 북부 지역의 결핵 치료를 목포결핵병원에서 전담하여야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결핵병원 수용 능력은 총 1,028병상(목포 360, 마산 768)에 불과하여 현재 결핵 환자 수 43만 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 효과적 결핵치료를 위한 격리입원치료기관의 필요

결핵환자는 장기간 꾸준한 치료를 요하고 있어 결핵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격리치료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의 존재가 절대 필요하며, 국립결핵병원의 경우 초치료 실패자나 난치환자를 전문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초치료 실패로 결핵이 악화되어 우리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비율은 43%에 달하고 있어 현행 결핵치료체계의 보건소 초치료 효율성을 심각히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 나라 결핵관리 문제점?

### □ 보건소 초치료 위주 치료체계 문제

결핵예방법과 결핵 관리 체계를 보면 결핵환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보건소에 등록하여 투약치료하고 있으나 사회의 결핵환자 기피와 장기간 약 복용 등의 어려움으로 결핵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건소는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결핵 약을 투약하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굳이 입원치료를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자기관리 부족과 결핵협회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결과물을 얻는데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 기간동안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검사결과와 치료시기의 불일치가 생깁니다.

양성환자, 난치환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 □ 국립결핵병원의 역할 불확실

국립결핵병원은 생활이 어려운 재 치료환자나 난치환자에 대한 국가 구호차원에서 무료로 가까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감염 예방에 일조하고 있으나 국가결핵관리 체계상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와의 결핵 치료체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은 국립결핵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결핵환자 입원 치료 실적이 적습니다.

### □ 재 치료 실패자나 난치환자 관리제도 미비

재 치료 실패자, 난치환자를 국립결핵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귀 기울여야 할 결핵정책

### □ WHO (세계보건기구)

- 결핵치료를 위한 격리요법 사용을 권장하는 보고서 발표내용 (97.5 보건세계)

격리요법의 조속한 시행은 현재의 환자 수를 억제 할 수 있고 향후 10년만에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감염과자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개월 내지 8개월이나 되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약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신종 결핵균을 만들어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 미국의 결핵관리

1980년대 중반부터 AIDS와 이민의 증가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결핵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적서비스의 저하 즉 정부주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핵증가에 위기감을 갖은 미국의 정부와 의료계는 DOTS(직접감시하의 단기화학요법)의 보급 등 강력한 결핵대책을 실시하여 최근 결핵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민간위탁 반대근거

### □ 국가 보건복지정책의 역행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 등 관리는 국가의 전염병 관리 시책중 일부분으로서 민간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경우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 및 난치성 결핵환자의 입원치료시설로서 결핵환자 대부분이 영세한 사람(국비환자 80%)으로서 장기입원시 경제적 여건상 일반 병·의원 입원치료가 불가능합니다.

### □ 결핵사업특성상 민간위탁운영 곤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내용상에 정부사업중 일부인 결핵전문치료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어긋납니다.

- \* 민간위탁기준    단순사실행위 및 행정적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 경제성 우선으로 인한 결핵치료사업 수행 소홀 우려

민간위탁경영의 주목적은 국가경영보다 민간경영이 좀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민간병원은 의료법사의 법정의료인력 충원과 높은 인건비 지급으로 현재의 진료 수익 외에 국가예산지원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경영수지개선의 일환으로 일반진료과목 개설시 결핵환자 치료는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려날 것입니다.

### □ 서부권환자 및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

현 입원환자의 70%이상이 전남인근 도서지역출신이며 '98년부터 시작한 낙도이동순회 진료반의 무건강료검진과 건강교육포기로 인해 이 지역주민의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 수탁자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국가사업 책임소재 혼란

수탁자의 책임성, 도덕성 결여로 부실운영, 개인영리추구 운영 등 공익성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정부로서는 책임추궁이 곤란하며, 또한 경영권회수 타인위탁 운영방식변경에 따른 결핵환자관리 방치가 예견됩니다.

결핵환자는 격리수용의 필요가 있어 독립된 결핵병동 내지는 결핵병실을 갖추어야하는 바 민간병원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결핵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현실적인 부담능력이 없어 결핵치료를 포기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설령 결핵환자 본인이 부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결핵 특성상 진료비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어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우리병원과 같은 시설, 장비를 유지하면서 진료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자운영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민간에게 결핵 진료사업을 위임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 □ 국립결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 ▶ 국립결핵병원의 역할 명확화로 결핵전문치료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 ▶ 예산중복의 요소를 없애고 통일적인 결핵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소, 결핵협회, 국립결핵병원등 각각 실시하고 있는 결핵퇴치사업을 보건소에서 초치료, 국립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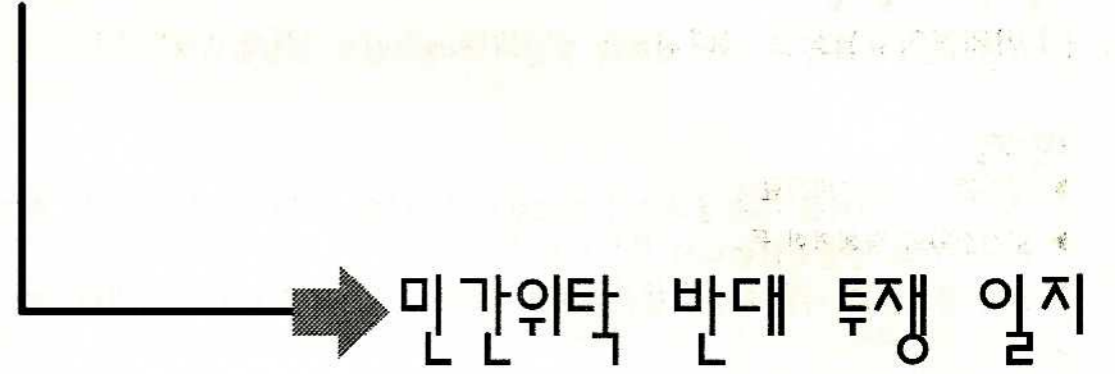
핵병원에서 재치료 실패자나 난치환자 치료, 결핵협회에서 기술지원과 결핵실태조사 역할 정립으로 상호 협조하에 효과적 결핵치료체계 구축을 하여야 합니다.

□ 병원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결핵퇴치사업에 앞장서야 합니다.

- ▶ 무의촌, 낙도 순회진료를 통하여 무료건강검진과 주민건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보건소와의 결핵협회 등과 업무협조로 병상가동률을 90% 이상 높여야 합니다.
- ▶ 외래환자에 대한 치료 실시로 결핵조기치료를 유도해야 합니다.
- ▶ 월 1만원의 입원비를 무료로 개선하여 극빈계층 구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 ▶ 난치환자에 대한 폐절제 수술을 확대해야 합니다.



##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보건의료단체 :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결핵병원 투쟁 전담반
- 학생단체 : >경인지역 의과대학 학생회 협의회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울산대, 순천향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 한림대), >경인지역 간호학과 학생회대표자 협의회 (서울대, 연세,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 >광주 전남 학생 모임 >광주지역 보건의료의약계열 학생회협의회 >건강사회 열어가는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 사회단체  
목포 : 목포노동청년연대,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목포YMCA, 목포환경운동연합  
인천 : 새날 청년회.
- 정당단체 : (가칭) 청년진보당 준비위원회

### 2월17일

- ▷ 국립목포병원민간위탁방침을 내용으로한 정부조직개편소식을 들었습니다.
- ▷ [아름다운내일을 준비하는 사람과사람들] 신문편집팀이 환자비상대책위(준)를 만들고 비대위구성을 전체 환자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 2월18일

- ▷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박권상)가 국립목포결핵병원 99년도중 민간위탁을 언론을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환자비대위(준)에서는 정부의 결핵사업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국립목포 결핵병원환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배상훈)를 구성했습니다

### 2월19일 - 6월16일

▷인천새날청년회를 통하여 컴퓨터 통신에 투쟁사항을 올렸습니다.

### 2월20일

▷제1차보고 회의를 병원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때 목포KBS방송국에서 취재하고 주요 뉴스시간대 방영되었습니다.

▷전체 환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으로 투쟁기금 60여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 2월22일-2월25일

▷민간위탁반대를 내용으로 프랑카드 3개를 제작하여 병원주위에 부착하였고 병원6층 창문에도 대형 대자보로 구호를 만들어 부착했습니다.

### 2월27일

▷제2차보고 회의를 병원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병원의 입지조건을 탐낸 일부지역유지(애증원:정신지체자수용기관)가 위탁운영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 위해 서울 상경투쟁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2월28일-3월8일

▷비대위에서 서울상경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병원노련, 결핵협회 관계자를 만나 대처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3월5일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이 문제 있다는 내용으로 내일신문, 전남매일, 무등일보, 광주일보, 의사신문, 후생신문에 보도되면서 목포지역주요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 3월9일 -3월11일

▷제3차보고 회의를 병원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서울상경투쟁을 결의했고 목포KBS, MBC에서 주요뉴스시간대 보도했습니다.

▷비대위는 3차보고대회이후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목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구성을 제안했습니다.

### 3월13일

▷국민회의 보건정책담당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및 결핵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3월14일

▷제4차보고 회의를 병원강당에서 개최하고 서울상경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손말현 국립목포병원장이 현재까지의 민간위탁진행상황과 장관면담에 이르기까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병원장이 서울로 상경해 장관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 3월 17일

▷목포지역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참가단체는 목포 환경운동연합, 목포 YMCA, 목포 민주시민운동협의회, 국립목포병원 환자 비상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목포민주청년회, 목포노동자회, 전교조 목포지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목포분회, 목포지구 총학생회 협의회 등이 참가하여 민간위탁반대를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목포 MBC, KBS에서 주요 뉴스시간대에 간담회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3월19일 - 3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9일 한국일보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의견광고란에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반대를 내용으로 광고를 내었습니다.

### 3월 22일 - 3월 24일

▷22일 10명의 환자들이 제 1차 서울 상경투쟁을 하였습니다.

▷23일 국민회의 중앙당사앞에서 집회를 가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김대중대통령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4일 서울역집회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세계결핵의 날 행사장에서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 3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비대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간추린 내용은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입니다.

### 4월 3일 -4월 7일

▷상경투쟁후 비대위에서는 국회청원을 준비하기로 하고 목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전전과 서명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거동이 그나마 가능한 환자들이 외출, 외박 등의 이유를 달고 병원을 빠져나와 총 4개조로 목포역, 차 없는 거리,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5만 목포시민중 4만1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 4월 7일

- ▷보건의 날을 맞아 비대위에서는 전체 병원환자가 참여하는 목포역전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KBS-1467 라디오 생방송에 비대위원장이 출연하여 민간위탁반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4월 10일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목포지역 100인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 ▷100인 선언은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에서 맡아서 조직해 주었습니다.

#### 4월 11일

- ▷연세대에서 열렸던 [과문]공연장에서 선전전과 서명전을 전개하였습니다.

#### 4월 12일

- ▷목포 MBC취재현장 800에서 '갈곳 없는 결핵환자들'이란 제목으로 목포병원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음을 방영하였습니다.

#### 4월 12일 - 4월 21일

- ▷이 기간 비대위는 국회청원준비작업을 하였습니다.
- ▷MBC 2580 담당자를 만나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취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MBC 측으로부터 검토중이라는 반복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 4월 22일

- ▷국민회의 이성재 보건복지 상임위원의 소개서로 국회에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반대 국회청원을 접수하고 상임위원 전원에게 서명지와 청원관련 서류를 전달하였습니다.

#### 4월 27일

- ▷목포시청항의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목포시청은 비대위가 요구한 [국립목포결핵병원은 목포전남의 마지막 치료기관입니다.]라는 현수막검인을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국회 청원 보고대회를 겸해서 개최되었습니다.
- ▷목포MBC에서 국회청원 보고대회를 주요 뉴스시간대에 방송하였습니다.

#### 4월 29일 - 5월 1일

- ▷비대위에서는 광주 서명전, 선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조선대학교 '학생연대'에서 개최한 반자본문화제 [장전]에 초대받아 3일간 광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4월 30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광주전남 5.1절 전야제에 참가하였습니다.

#### 5월 4일

- ▷병원신보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영화 구체적 방안 없음 성토'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 5월 8일 -5월 11

-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의 도움으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목포인권영화제에서 선전전과 서명전을 하였습니다.

#### 5월 14일 -5월 18일

- ▷목포역에서 개최된 5.18민중항쟁기념 행사에 참가하여 선전전, 서명전, 모금전을 하였습니다.

#### 5월 15일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 (대표: 전남대의대본과 4학년 이병오) 초청으로 전남대 오월제에 참가하여 비대위원장이 정치연설을 하였습니다.

#### 5월 22일

- ▷광주 타임지에서 보도한 병원 뒤 건축물 폐기장 허가에 관한 대응,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 5월 24일

- ▷전남대 의대 (의료연구회, 의학과 여학생회, 노래패 진달래, 간호학과 1학년)에서 목포결핵병원 비대위 지지방문을 왔습니다. 이날 전남대 의대에서는 축제때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투쟁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개최하여 생긴 수익금 105만원을 투쟁기금으로 비대위에 전달하였습니다.

#### 5월 25일

- ▷부정축제로 퇴진한 주양자 장관후임으로 발령난 신임 김모임장관에게 국립목포결핵병원 운영검토반 활동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5월 26일

-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각 언론사를 통하여 병원운영비를 99년에는 용역비로 이전할 것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 5월 27일-6월 2일

▷비대위에서는 6.4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도의원후보, 시장후보, 시의원후보 출마자를 대상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의정활동 서약서를 조직하기로 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활동결과 45명의 후보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목포시장으로 출마한 권의담 후보를 비롯한 국회의원도의원후보 2명은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 5월 28일

▷제 2차 목포역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은 투쟁100일을 맞아 기획예산위원회 용역비검토 발표를 항의하고 서울상경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비대위는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간지에 민간위탁반대선전물을 배포하고 각 대학 총학생회를 방문하여 학내 배포를 요청하였습니다.

### 5월 29일

▷김모임장관에게 6월 15일 까지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6월 2일

▷전남대신문에 민간위탁반대투쟁에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 6월 3일

▷KBS라디오 동서남북에 비대위원장이 출연하여 민간위탁반대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6월 4일-6월 16일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46명중 15개 동에서 당선자를 내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민간의탁반대목포시 특별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며 서울 상경투쟁준비를 끝마쳤습니다.

### 6월 17일

▷06시 환자4명이 목포를 출발해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보건의료청년회와 결합하고 국민회의중앙당사와 한나라당중앙당사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하루인권소식을 통하여 민간위탁반대투쟁을 계속적으로 보도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명동성당에 서울투본 천막을 건설하고 서의청, 경인의학협, 경인간대협, 서울대 간호대학생회와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매일 투쟁속보를 나우누리 찬우물 15번에 띄우기로 하고 서의청에서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 6월 18일

▷목포내일 신문에 보도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중의료연합에서 지지방문을 오셔서 투쟁지원금 5만원을 주셨습니다. 이때 민의련에서는 보건의료대표자회의가 노사정위원회에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반대를 요구안으로 제출하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사뉴스 최성희기자가 농성장을 찾아와 취재해 갔습니다.

▷서울대 병원앞 광장에서 열린 (98임단투 승리와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병원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서울 투본장 투쟁발언과 선전전이 있었습니다.

### 6월 19일

▷과천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항의집회를 갖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관계자가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습니다.

▷김모임장관이 6월 10일 목포병원 방문예정을 6월 25일로 연기하고 다시 7월 7일로 방문을 미루었습니다.

▷서울의대, 순천향의대, 인천 새날청년회, 민의련 등의 단체에서 지지방문을 오셨습니다.

### 6월 20일

▷목포노동청년연대에서 서울투본이 부탁한 프랭카드를 화물로 보내오고 서의청에서 결핵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민신당과 자유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하여 면담일정을 정했습니다. 국민신당 22일, 자민련 22일 ▷국민운동본부 서울역 마무리 집회에서 서울투본장이 발언하였습니다.

▷경원대 법정대 진보와연대를위한 보건의료연합, 서울대간호대에서 지지방문을 오셨습니다.

### 6월 21일

▷명동성당에서 주일미사참여자 5대공기업노동조합집회참석자를 상대로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목포민주운동협의회에서 6월 25일 서남방송과 목포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목포포럼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명동성당 성소모임, 서의청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6월 22일

▷국민신당과 자민련을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신당방문결과-비대위가 요구하는 민간위탁철회는 이미 한나라당, 국민회의에 접수된 중복민원이나 압력이될수 있다 (민원국관계자)

\*자민련방문결과-김모임장관이 자민련에 입당예정이다. 직접연락해서 잘되도록 알아보겠다



▷ 인천새날청년회,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처음처럼)동아리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6월 23일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결성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참가단체- 서울투본, 서의청, 진보의련, 민의련, 경인의학협, 경인간대협  
▷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면담은 하지 못하고 과천 종합정부청사 안내등에서 보건복지부 방역과 이창본 서기관과 통화만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기획예산위 발표는 일반사항이고 민간위탁문제는 국민회의와 청와대문제이다. 운영검토반은 카톨릭대학교 명광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1분과는 결핵실태와 전체사업을 총괄하고 2분과는 민간위탁타당성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비대위가 요구한 목포포럼은 일정상 참가할 수 없다.

▷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새날청년회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6월 24일

▷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에서 이창본서기관과 6월 25일 목포포럼에 관계자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복지부에서는 병원측대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포럼참석을 거부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포럼팀에선 7월 8일 이후로 포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 한성대 학보사에서 농성장을 취재하였습니다.

▷ 경희대 한의대, 청년진보당주비위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6월 25일

▷ 6월 29일 공대위 발족식 집회신고를 마치고 전국 보건의료단체에 목포투본자료집을 발송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결핵관리 발전심의위원회에서 26일 목포병원 방문이 결정되어 서울투본위원장인 목포병원을 다니러 내려갔습니다.

▷ 청년진보당을 준비하는 북부지역 청년모임(희망)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서의청에서 공대위분담금 10만을 내주셨습니다.

### 6월 26일

▷ 국가결핵관리심의위원회 2분과 위원들이 목포병원에 도착하여 민간위탁타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경희대한의대 동아리(처음처럼), 경인의학협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6월 27일

▷ 공동대책위원회(준) 집행위원회 회의가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이 참석하여 공대위 발족식과 공대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인천새날청년회, 인천 (일하는 아름다운사람들 민들레)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6월 28일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농성단 대표와 명동성당 측과 농성장철거에 대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내용 - 명동성당측 : 우리는 충분한 신도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그이후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나가달라.

농성단대표 : 명동성당이 갖는 사회적 위치는 매우 크다. 농성단 스스로가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마지막 호소를 하고자 온 것이다. 갈곳이 없다.

▷ 명동성당측에서 오후 2시를 기해 기습적으로 농성단 천막을 강제철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투본은 목포에서 동네주민들이 빌려준 천막을 성당측에 빼앗겼습니다. 이때 건설일용노동조합, 한총련, 한려대교수 단식농성단, 실업자 연맹 등에서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인권운동사랑방, 민의련, 경인의학협, 서의청에서 철거소식을 듣고 지지방문을 왔습니다.

### 6월 29일

▷ 목포투본에서 환자 36명과 광주전남 학생모임(대표: 이병오)이 공대위 발족식과 보건복지부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 과천 종합정부청사앞에서 보건복지부 항의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경인의학협에서 연대사와 명동성당까지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 명동성당 언덕에서 목포비대위 36명과 공대위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등 100여명이 모여 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명동거점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목포환자비대위 36명이 목포로 돌아가고 서울대간호대 천막을 빌려 농성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 6월 30일

▷ 목포결핵병원당국은 서울농성을 문제삼아 서울투본위원장과 비대위원 문용호를 강제퇴원조치함을 통보하여왔습니다.

▷ 조선대 약대, 서울대 의예과 학회(들팔이), 경원대 한의대 동아리(풀꽃), 인천 새날청년회, 진보의련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1일

▷ 목포투본에서 공대위 발족식과 관련해 홍보팀장 박원용씨가 병원측으로 부터 강제퇴원당했음을 알려왔습니다.

▷ 목포노동청년연대에서 제안한 서울투본지원을 위한 목포지역대책모임 구성에 관해 목



포투본에 설명하고 실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 병원환자가족, 이화여대, 순천향의대, 독일 노동조합연맹, 스웨덴노동조합연맹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2일

- ▷ 신문사, TV방송사, 주간지, 월간지 등 18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 광보협에서 7월 10일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와 서울투본지원을 위한 일일호프를 조선대 앞에서 개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 순천향의대 의예과에서 7월 19일 서울투본지원을 위한 일일호프를 개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 청년사회인클럽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3일

- ▷ 주간노동자신문, 광주평화방송, KBS,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대생신문에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 ▷ 퇴원환자 서양진씨가 3만원을, 청년진보당(주) 성동지부와 마포지부에서 투쟁지원금 5만원을 가지고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4일

- ▷ 공대위 집행위원회 회의가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이 참석하여 유인물제작, 인쇄대자보, 단체분담금납부, 항의방문시 인원동원, 언론사보도요청 조직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 강제구조조정철폐 및 금융노동자생존권결의대회에서 민의련 중심의 선전전이 진행되었고, 광주평화방송에서 월요일방영예정인 '민간위탁반대동정'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 진보민청, 인천새날청년회에서 지지방문오셨고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 회장단이 투쟁기금 5만원을 가지고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5일

- ▷ 명동주변 [하늘 땅] 음식점에서 투쟁기간중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주셨고, 서의청에서 여름옷 두벌을 주셨습니다.
- ▷ 한총련에서 송화가루 1병과 꿀1병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 ▷ 전 일본 통일 노동조합연맹, 일본 국철노동조합연맹, 병노련에서 지지방문을 오셨습니다.

### 7월 6일

- ▷ 국민회의 항의집회후 오길록민원실장, 정책전문위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결과- 오길록실장 : 당과 보건복지부는 민간위탁반대로 잠정합의한 상태이다.

전문의원 :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위탁반대입장을 갖고 있으나 시간을 갖고 노력 할 사항이다.

집회참가단체 - 서울투본, 서의청, 서울대의예과학회 [돌팔이]

- ▷ 목포투본에서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핵병원 방문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려왔고, 목포민주협의회에서는 관계당국이 참석하지 않는 포럼은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 서울대 의예과 학회[돌팔이]가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라는 투쟁문을 통신에 올린 것을 확인하였고 서의청을 중심으로 명동성당 거점선전전을 하였습니다.
- ▷ 서울예술 전문대학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7일

- ▷ 서의청에서 의료계열학과 교수단 성명서 및 서명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 후생신문에 국립목포결핵병원 투쟁소식이 기사화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과,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울연합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8일

- ▷ 보건신문에서 7월 13일(월)에 기사 나간다고 인터뷰함.
- ▷ 국립목포결핵병원을 1962년에 처음 만들었던 [캐나다 유니테리안(국제봉사단체)-현재 없음]의 그 당시 회장 보좌역을 15년간 지낸 박재주 할아버지께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박재주 할아버지께서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 시키려는 조치는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하며 만약 증언이 필요하다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상경투쟁 조합원들이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 7월 9일

- ▷ 광주전남학생대책위에서 공대위 분담금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7월 10일

- ▷ 시사뉴스 7월 23일자 114호 p.34-35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사반대의 내용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신문에 [건치논단] 7월 5일에 목포결핵병원 내용이 실렸습니다.
- ▷ 민의련에서 지지방문후 참가단체 분담금을 10만원을 납부하고, 일간신문에 독자 투고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 2차 우편발송 : 전국 47개 병원노조에 유인물과 인쇄 대자보를 발송하였습니다.



## 7월 11일

-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가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 참석하여 ① 다음 주 중에 결핵관련 전시물 만들기 ② 청년의사 신문 섭외하기 ③ 한나라당 방문하기 ④ 교수님 투고 부탁하기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 ▷민족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에서 7월 11일자로 통신을 통해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인도주의 의사협의회에서 이번주 내에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언론사를 통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 ▷부산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에서 오늘 부산에서 서명전 선전전을 수행하였습니다.
- ▷광주지역 보건의료의약계열 학생회협의회에서 일일호프 수익금 33만원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 ▷인천새날청년회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12일

- ▷여의도 전국노동자 대회 참가하여 선전전, 서명전, 모금전 수행하였습니다. 참가단체는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 경인간대협, 서울대 의예과 보건의료학회(돌팔이), 인천노동자였고 이날 11만원의 모금과 6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 ▷전국으로 배포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문에 국립목포결핵병원 투쟁소식이 기사화되어 실렸습니다.

## 7월 13일

- ▷광주평화방송에서 전화취재를 해 왔습니다.
- ▷기획예산위원회 항의방문 왔습니다. 참가단체는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 경인간대협, 서울대 의예과 보건의료학회(돌팔이)입니다.  
-면담결과 : 예산청 행정개혁단 사무관 면담.
- ①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이 결정된 배경에는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 ②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예산은 전액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수탁자가 사용목적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권을 줄 것이다.
- ③ 구조조정은 정권 내내 계속될 것이다.
- ④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에 관련해 예산은 8월이면 결정될 것이다.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국민회의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할 것이고, 그 결과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 ⑤ 수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반민반관이 될지 특수법인체가 될지 수탁에 관한 결정사항은 아직 없다.
- ⑥ 이에 대해 공대위는 전염병 예방사업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충분한 정책심사가 없

었다. 그리고, 예산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간위탁 후 수탁자의 진료비 인상과 일반진료 가능성이 없다고 한데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회의는 민간위탁 후 진료비인상과 일반진료개설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수탁에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익창출이 아닌가? 수탁자의 도덕적결여로 인해 국가책임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반관반민의 타 기관을 보았는가? 민간위탁 전 예산편성은 예산청에서 실시하지만 민간위탁 후 병원관리는 복지부 소관이 아닌가? 이후 수탁자가 어떻게 할지는 예산청에서 감독이 가능한가? 전염병 예방사업을 모두 다 민간위탁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감.

## 7월 14일

- ▷서울대의예과(돌팔이)에서 동료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전, 서명전을 하였습니다.
-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7월21일 보컬선거로 관계자가 없다며 보선 후에 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학생들이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15일

- ▷AP통신에서 보도자료와 농성장을 취재 해왔습니다.
- ▷전국철거민연합에서 지지방문 오셔서 전농동 박순덕열사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 7월 16일

- ▷서울대의예과(돌팔이)에서 학내모금 182,500원과 600여명의 서명용지를 가지고 농성장을 방문해주었습니다.
- ▷명동거점 선전전에 서울투본, 서의청, 서울대학교의예과(돌팔이)가 참여해 주었습니다.
- ▷보건신문(21일자)에 명동성당농성소식이, 한겨레신문(15일자) 국민기자석에 서의청 김창보회장님의 투고가 실렸습니다.

## 7월 17일

-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이 참석해서 1. 재정사업계획 마련, 참가단체 분담금 납부 확인 2. 선전물 새로 만들기 3. 선전전 장소 변경(대학로, 서울역, 신촌) 4. 19일 일일호프 참가예정 5. 항의방문(27일-국민회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명동성당거점선전전을 서울투본과 민의련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인천 '희망터'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7월 18일

- ▷명동성당측에서 또다시 천막철거를 요청해왔습니다.
- ▷인천노동교육연구원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 민족민주열사 추모위, 민족주의민주주의서울연합, 인천새날청년회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7월 19일**

▷ 목포투본에서 비대위원2명(임완, 양재혁)이 농성에 합류했습니다.  
▷ 순천향의대에서 일일호프를 개최하여 인사하러 갔다왔습니다.  
▷ 노래선언 최도은씨와 민주노총인천본부 실무자 분이 지지방문오셨습니다.

**7월 20일**

▷ 기획예산위 항의 집회에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 서울대의예과 [돌팔이], 전국보건 의료 대학생회 이화여대 지부가 참가하였습니다.  
▷ 국무총리실 최인욱 보건복지담당자가 수고한다는 격려전화를 주셨습니다.  
▷ 건강세상 열어 가는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가 공대위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 이화여대지부가 지지방문오셨습니다

**7월 21일**

▷ 기획예산위원회 재정2팀장 구분진 서기관, 이명후 사무관과 공대위(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간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내용 - 국립목포결핵병원 및 결핵사업은 정부사업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다.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시키려 한다. 환자개인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은 ①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② 민간 위탁이 되면 서비스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③ 병상가동률이 낮다. ④ 시설이 좋은 의료기관에 민간 위탁되면 모든 치료가 가능하다. ⑤ 민간에게 위탁해도 공무원이 운영 할 때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⑥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위탁의 주원인이다.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의 답변  
① 양심적인 민간법인에 위탁한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양심적이란 규범 적이라 판단근거로 부족하다. 그리고 철저 사적의료에 (개인부담) 치우치고 고비용 의 의료로 치우친 한국의 현실에서 민간부분의 의료기관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과 거론한(전대병원)법인 역시 적자라고 한다. 때문에 민간위탁은 더욱더 부실한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되면 수탁자의 인척이 병원을 장악하고 결핵치료의 필수약제를 고가 판매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환자와 병원간에 심각한 마찰이 일어난다. 국가에서 민간위탁한 복지원 등 각종기관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효율성을 높인다고 환자의 입퇴원을 민간위탁자 마음대로 앞당길 수 있다.  
② 공공성이 매우 높은 기관의 민간위탁이 본래의 기능을 높이는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심정적이며 추측적이다. 예산위에서 민간이 공공기관보다 낫다는 근거가 있는가? 오히려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높다. 우리나라 일반진료기관의 75%가 민간위탁임을 볼 때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③ 공무원 구조개혁은 민간위탁으로 풀이될 문제가 아니다. 병원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④ 병상가동률과 서비스 문제는 보건소 결핵협회에서 치료하고 있는 난치성 2차 환자를 수용하면 병상가동률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문제는 우선적으로 간호인력의 확충이다. 간호사 1명당 10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개념으로 보면, 1명 의 간호사가 3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목포병원은 3배이상이다.  
- 매우 성심 성의껏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견개진을 해주신 구분진 서기관과 이명후 사무관께 감사드립니다.  
▷ 한총련 소속 각 대학 단대학생회장분들이 민간위탁반대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고려대의대에서 지지방문 오셨고 개인적으로 투쟁기금 1만원을 주셨습니다.

**7월 23일**

▷ 명동성당측에서 요구한 철거시한이 다가와 경찰침탈에 대비에 각종자료를 향린교회로 옮겨놓았습니다.  
▷ 민의련에서 병노련 투쟁속보 67호에 실린 국립목포결핵병원 관계기관 입장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병노련 투쟁속보 67호 내용 중 관련부처 구조조정 안>  
■목포결핵병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위탁 반대 의견을 기획예산위와 행자부에 제출하였음.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위에서도 목포결핵병원은 국립병원으로 남길 가능성 보임 단, 운영은 국립병원으로 하되 내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가질 예정(용역이 가능한 부서는 용역으로, 진료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인력감축등등)  
보건복지부 일정 -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결핵발전위원회에서 향후 결핵사업보고서를 7월말~8월초 발행하고 토론회, 선전전 - 9월 정기국회때 안 상정-99년부터 시행  
▷ 공대위(서울투본, 민의련)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1부를 방문하여 보도자료을 전달하고 기사화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화여대의예과에서 교내선전전과 서명전을 하였습니다.  
▷ 부산 민의련에서 2차 서명지를 보내왔습니다.

**7월 24일**

▷ 명동성당측이 농성단 자진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서울투본에 전달하였습니다.  
▷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 이화여대지부에서 학내 서명지와, 쌀, 투쟁기금을 8만원을 가지고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 경인간대협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7월 25일

- ▷ 공대위 2차선전물을 제작하였습니다
- ▷ 공동대책위 집행위원회 회의가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이 참석하여 1.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자고 결의 2. 다음주에 가시화될 기획예산위원회의 입장에 따른 앞으로 공대위 투쟁방향과 일정을 논의함 3. 명동성당측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다른 농성단과 함께 공동행보를 취하기는 것을 논의하기로 함 4. 명동성당 측이 예전에 철거해간 천막을 되돌려달라는 투쟁을 벌일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 ▷ 공대위와 경인간대협, 경인의학협, 한양대의예과학생들이 고 박순덕열사1주기추모식에 참석하여 선전전과 서명전을 하였습니다.
- ▷ 중앙대 간호학과 학생회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7월 27일

- ▷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항의집회를 서울투본, 서의청, 경인지역 간대협, 서울대 의예과 학생회, 서울대 의예과 [돌팔이]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집회후 그 동안 서명 받은 서명지와 각 단체 성명서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면담내용: ① 7월 23일 국민회의와 보건복지부간에 당정협약이 있었다. 당정협약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② 기획예산위에서는 민간위탁방침으로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당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15일경 99년 예산이 발표될 것이다. 이때 용역비인지 운영비인지 보아야 한다. 8월말경까지는 지켜보자.
- ▷ 한나라당 방문하여 그 동안 서명 받은 서명지와 각 단체 성명서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면담내용: 서울투본이 지난 6월 17일 한나라당에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하니 민원실장과 복지담당위원이 없다는 이유로 7월 말경에나 다시 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보좌관 이동석씨와 전화 통화하였습니다.
- 내용 : ① 22일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반대로 입장을 발표함. ② 현재 진행상황은 민간위탁방침 철회로 가닥이 잡히고 있음.
- ▷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서울 시립대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7월 28일

-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획예산위 항의 집회를 서울투본, 민의련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 목포투본에서 지역대책위구성을 위해 단체방문을 실시한다고 연락왔습니다.
- ▷ 목민협에서 목포시의회 특별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제안서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7월 29일

- ▷ 기획예산위에서 민간위탁 보다는 agency(국가관리 책임 경영제) 도입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구분진 서기관과의 전화통화를 하고 목요일 면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 목포시 시의원 배종범씨께서 자료요청을 해오셨습니다.
- ▷ 청년진보당 인천학생발기단, 서울중앙병원(시사연구회)에서 5만원의 투쟁기금을 가지고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7월 30일

- ▷ 기획예산위 방문하여 공대위(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와 구분진서기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면담내용: ① 국립목포결핵병원 운영을 agency(책임경영행정)로 할 것이다. 곧 발표를 한다. ② 책임경영제의 주관 부서는 복지부다. 책임경영제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가 병원 책임자의 운영방안을 받아 정해질 것이다. ③ 책임경영제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④ 수익성을 바탕으로한 경영평가는 아니다. 환자들의 치료실적, 환자들의 만족도가 포함될 것이다.
- ▷ 목포시의회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에 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30일 각 관계부처로 발송한다고 목포시의원 배종범씨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 ▷ 경인간대협에서 공대위분담금 10만원을 주셨습니다.

7월 31일

- ▷ 보건복지부 agency 담당 고태규씨와 통화하였습니다.
- 통화내용: ① 우선적으로 기획예산위 발표가 있어야 세부(안)를 만들 수 있다.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위에서 잡는다. ② agency에 대한 공대위 입장을 전달하려 한다.
- 복지부 : 문서로 전달하라.
- 공대위 : 무성의하다. 서울에 올라온 지 50여일이 되지만 관계 공무원이 다녀간 적도 없고 과천청사까지 갔지만 안내동에서 전화한 것밖에 없었다.
- ▷ 김홍일 의원 보좌관과 통화하였습니다.
- 공대위 : 목포에서 민간위탁 반대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김홍일 의원도 아는 사항이다. 찾아가서 의논 할 사항이 있다.
- 보좌관 : 다음 주 중 오전에 연락하고 오라.
- ▷ 서울투본장이 목포집회 참석차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8월 1일

- ▷ 병원장당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책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공대위일정을 보고하였습니다.
- ▷ 목민협을 방문하여 국공립병원 구조조정 자료 전달하였습니다.
- ▷ 환자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목포노동청년연대 주최 [국립목포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집회)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목포경찰서의 압력에 굴복한 병원당국이 환자들의 외출을 통제해 서울투본장만이 집회에 참가하여 선전전과 연설을 하였습니다.

### 8월 2일

▷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노동자 청년학생명동성당농성단 통일노래한마당'에 참가하여 투쟁보고을 하였습니다.

### 8월 3일

▷ 전국민주열사 추모회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8월 4일

▷ 목포KBS 뉴스에 민간위탁반대투쟁 소식이 방영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8월 4, 5, 6일 경인간대협 한마당에 참여하였습니다.

### 8월 7일

▷ 기획예산위에서 내주 초에 발표(책임행정기관)가 있다는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 전남대의대학생회(학생회장: 정종혁), 전남대(저항과 연대)학생14명이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8월 8일

▷ 전남대 의대, [저항과 연대]학생들과 함께 명동성당 앞 집회를 가져졌습니다.  
▷ 서울대에서 열린 제 6회 전국청년학생한마당에서 참가하여 [2부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는다]에서 투쟁보고을 하였습니다.

### 8월 9일

▷ 서의청 초청으로 청년진보당발기인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8월 11일

▷ 기획예산위원회가 agency계획을 포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위는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국립목포결핵병원 민영화방침을 재 심의하지 않는다.』며 이번주 발표예정이었던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국가책임행정기관화한다』를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전남대 학동 방송국에서 9월 방송제를 준비하면서 목포병원을 선정하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 8월 13일

▷ 서울투본과 민의련이 국회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① 국회의 이성재 의원을 방문해 이동석보좌관과 면담하였습니다.  
-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가 아직 국회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 관계로 국회내에서 주도적으로 문제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② 국회의 김홍일 의원을 방문해 이길로 비서관과 면담하였습니다.

-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 잘 알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파악하고 있다. 의료시설이 불충분한 목포지역에서의 병원 존속문제는 중요하다. 마산결핵병원관의 차별도 문제이다.

③ 이성재 의원실에서 국회의 정책자문의원과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공대위는 기획예산위에서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에이전시를 백지화시켜 명동성당이 해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현재 실정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당정협의를 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 8월 15일

▷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가 서울투본, 서의청이 참여하고 일일호프 제안서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 민중의료연합 주최 <보건의료 아카데미교실>에 참가하여 제3부[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현황 및 문제점, 우리의 요구] 부분에서 투쟁보고을 하였습니다.

▷ 조흥시스템 노동조합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 8월 16일

▷ 명동성당측에서 8월 20일까지 철수를 요청하였습니다.

▷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주최<보건과 사회>포럼에 참가하여 제3강 [현시기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부분에서 투쟁보고을 하였습니다.

▷ 한양대병원노동조합원이 지지방문오셨습니다.

### 8월 18일

▷ 보건복지부 항의집회에 서울투본, 서의청, 민의련, 경인의학협, 간대협, 서울대 간호대, 서울대의예과[돌팔이]가 참가해주셨습니다.

- 면담내용 :

- 공대위(서울투본, 민의련) / 복지부: 전병률 방역과장, 고태근 사무관

공대위 - 보건복지부의 목포결핵병원 운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운영에 대해 많은 일을 해왔다. 지난 6월 3일자로 [결핵관리사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 8월 13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에



국가의료기관으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공대위 - 여러 기관 국민회의, 기획예산위원회등을 다녀오면서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소극적이라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정협의를 조속히 해달라.

복지부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국기기관 존속에 대하여 장관님의 결재가 있기 전에는 내부방침이었다. 그러나 8월12일 장관님의 결재가 떨어져 각 부처에 우리부의 입장을 통보했다. 당정협의를 우리부가 하자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회의 정책조정실에서 당정협의를 소집해야 한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장관님의 결재 전까지는 소극적일 수는 있었지만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당정협의를 되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공대위 - 필요한 자료가 있다.

복지부 - 국립목포병원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부 의견(1998.8)과 국가결핵관리사업발전 방안 보고서(1998.8)를 주겠다.

### 8월 19일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이동석 보좌관과 전화 통화하였습니다.

서울투분 :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운영을 국가기관으로 존속하는 것을 마무리되었다. 국민회의에서 당정협의를 자리 마련해달라.

이동석 보좌관 : 당정협의를 하나의 사안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몇 가지 사안을 같이 해야한다. 하지만 당쪽에 국립목포결핵병원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되게끔 하겠다.

### 8월 20일

▷1999년 병원 예산이 용역비, 운영비 각50%씩 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남대 학동방송국에서 9월방송제때 방영할 민간위탁반대투쟁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오셨습니다.

▷행정자치부집회에 필요한 피켓을 서울대간호대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 8월 21일

▷행정자치부 항의집회에 서울투분, 서의청, 경인간대협, 서울대간호대, 서울대 의예과 [돌팔이]가 참가해주었습니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 담당자께서 현재 상황에서(우리나라 결핵실태) 국립병원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무리이다. 총리실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 8월 24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서울투분, 서의청이 참여하여 1. 9월12일 일일호프와 관련 보건의료대표자회의에서 후원하기로 하였음을 확인 2.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번주 2차례 집회개최 - 당정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관계자 방문 (국민회의, 기획예산위, 행자부, 국회, 보건의료 관련 교수) 3. 농성장 철수는 당정협의 후로 하고 진행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일일호프준비회의를 서의청과 서울대의예과(돌팔이)가 가졌습니다.

▷중앙대 간호학과 지지방문

### 8월 25일

▷행정자치부 항의집회에 서울투분, 서의청, 민의련, 서울대간호대, 경의대한의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세종로 청사 1층 안내소에서 행정자치부(김원옥씨)와 공대위가 면담하였습니다.

- 면담내용

공대위: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은 무엇인가?

행자부: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은 행정자치부의 독자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다. 정개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의견과 목포시의회의 건의문, 공대위의 집회를 통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공대위: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 철회할 가능성은 얼마인가?

행자부: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 어렵다.

민간위탁 철회와 관련해서는 하루아침에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공대위: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전염병치료기관이다, 월1만원의 치료비도 낼 수 없는 국비환자들이 40%이상이다. 환자들을 불모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행자부: 우리부가 공무원감축이나 비효율성을 내세워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개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국립병원 에이전시도 정개위에서 한 것이지 우리부가 한 것이 아니다.

공대위: 앞으로 어떠한 일정이 있는가?

행자부: 오늘 면담을 과장님께 보고하면 윗분들이 알지 않겠는가? 우리부가 민간위탁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직제령을 만드는 정도이고 일정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라? 민간위탁 작업에 대한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이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위에서 다 알아서 한다.

공대위: 관계된 부처와 당을 다녀왔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문제에 열쇠라고 한다

행자부: 우리는 정해진 것을 시행하는 부서이다, 우리부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 목포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문제도 걸려있다.

공대위: 다른 기관과는 충분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 당정협의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

행자부: 각 부처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당정 협의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공대위: 당정협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당정협의 소집은 누가 하는가?

행자부: 민간위탁이 현 장관님이 있을 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주장한 적도 없다.

▷민의련에서 투쟁기금 30만원을 주셨습니다.



8월 26일

▷기획예산위원회 방문하여 기획예산위 구분진 서기관과 면담하였습니다.

투 본 : 8월25일 행정자치부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들었다. 행자부에서는 자기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며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번 기획예산위에서 추진하던 책임행정기관이 백지화되어 유감이다. 백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위 : 행정자치부등에서 정부조직개편심의회 사항을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책임행정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부는 정개위 결정사항 이외 것만 하고 있다.

투 본 :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년도 국립목포병원예산이 운영비50%, 용역비 50%씩 이중배정 되었다고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의 입장인가?

예산위 : 예산청에서 한 것이다. 각 50%씩 배정된 것은 아직 논의단계이기 때문이다.

투 본 : 민간위탁이 철회되면 용역예산이 운영비로 전환될 수 있는가?

예산위 : 그럴 것이다.

투 본 :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될 전망인가?

예산위 : 국회가 열렸으니 9월 중순경 국정감사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임 위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때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투 본 :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위 : 우리부에서 정개위 결정에 따라 몇몇 민간위탁할 예정인 기관들과 접촉해 보았으나 민간위탁을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컸다.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많으면,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목포병원은 그대로 국립일 수밖에 없다. 민간위탁이 결정되어도 민간위탁 자체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투 본 :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국민회의, 자민련,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기관으로의 입장을 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공대위는 당정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찾고 있다. 당정협의를 소집되면 기획예산위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는가?

예산위 : 고위당정협의를 이루어지면 장관님이 나가겠지만 실무단위면 그에 맞는 사람이 나갈 것이다.

투 본 : 당정협의를 나가게 되면 결핵환자의 어려움과 공공의료강화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원 배종범씨께서 상황을 묻는 전화를 주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에 관한 목포시 건의문 각 부처 회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각부처 회신 내용 요약

보건복지부 : 현상황에서 민간위탁은 적절치않다. 민간위탁이 철회 되어야 한다는 입장

행정자치부 : 새 정부에서 심의 결정했고 발표한 사항이다.

청와대 비서실 :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검토하라고 함

국민회의, 자민련과 기획예산위에서는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진보당에서 취재 오셨습니다.

▷서울예전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8월 27일

국민회의 항의방문 집회에 서울투본, 경인의학협, 서울대 의예과[돌팔이]가 참여해주셨습니다.

8월 28일

▷부산, 울산공안조직대책위원회(울산시 동구청장 김창현 국가보안법구속사건)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8월 29일

▷공대위의가 서울투본, 민의련 모였으나 안전을 토의하지 못하고 9월1일 행정자치부 요구안 작성(민의련)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마쳤습니다.

▷서울예전, 청년진보당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8월 31일

▷서울대 간호대에서 지지방문 오셔서 행정자치부 집회시 필요한 구호 피켓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콤, 한세노동조합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9월 1일

▷행정자치부 항의집회에 서울투본, 민의련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 김원옥씨와 면담하였습니다.

-면담내용

공대위 : 국립목포결핵병원에 민간위탁반대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행정자치부 민원으로 접수 하고자 한다. 접수증을 달라.

행자부 : 접수증은 이곳에서 당장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 안으로 행정자치부 입장을 담은 문서를 보내겠다.

공대위 : 행자부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방침에 변화는 있는가? 목포시의회에 보낸 회신내용을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입장인가?

행자부 : 뚜렷하게 변화상황은 없다.

행자부 : 국립목포병원에는 환자 3명당 1명꼴로 공무원이 있다. 모두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을 없애고 환자들에게 치료보조비를 지급하면 환자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공대위 : 국립목포결핵병원에도 자체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환



자들이 병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 중 집도절도 없는 사람이 상당수이다. 이 환자들에게 정부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결핵은 약만 먹는다고 낫는게 아니다.

공대위: 지난 8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위탁 대신 국가기관으로 존속을 발표했다.

행자부: 복지부장관의 결정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각계 전문가가 모인 정개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공대위: 당정협의를 하면 누가 나가는가?

행자부: 당정협의로 가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당정협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국장급 정도이다.

공대위: 다음주에 또 오겠다.

행자부: 전달할 문서가 있으면 우편으로 하라.

### 9월 2일

▷ 전남대의대 학생회장님께서 백서발간비용마련을 위한 주점을 9월18일 연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 국회보건복지위원회들에게 보낼 자료집(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 서울대 간호대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 9월 3일

▷ 국회의 항의집회에 서울투본이 참여했습니다.

▷ 국회의 오길록 민원실장과 면담했습니다.

-면담 내용

[행정자치부 행정국장과 오길록 민원실장과의 전화통화 내용도 포함됨]

투 본: 당정협의를 열릴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

민원실장: 국회의와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원실장: 아직도 안 내려갔나? 내려가서 기다려라.

투 본: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못 가고 있다.

투 본: 복지부에서 8월12일 [국가기관으로 존속] 발표 사항을 알고 있다. 기획예산위에서도 책임행정기관으로의 전화를 시도하려다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해달라.

민원실장이 행정자치부로 전화를 한다.

민원실장: 행개위에서 결정된 사항인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서부권 환자를 담당하고 마산 병원은 동부권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당정협의인가? 대통령 재심사인가? 대통령 심사를 다시 받으면 되는가?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민원실장이 설명함]

국립목포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각 조직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들어

가고 있다. 하나들 재심사하면 구조조정이 되겠는가?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 행정으로는 이미 정리된 사항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야기한다함.

투 본: 행정력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국민회의가 우선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입장의 가닥을 잡아달라. 정치적인 문제이다. 다음주에 집회를 하러 또 온다.

민원실장: 오기 전에 당으로 전화를 하라.

### 9월 4일

▷ 국회보건복지상임의원에게 투쟁경과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명동성당측에서 또 다시 천막철거를 요청해왔습니다.

▷ 서울대약대에서 지지방문오셔서 투쟁기금10만원을 8월20일 입금시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 목포투본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투쟁에 결합하기 위해 1명(양재혁)이 올라 오셨습니다.

### 9월 7일

▷ 청년진보당 당보(8월31일)에 명동성당 농성기사가 실렸습니다.

▷ 3차유인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9월 8일

▷ 행정자치부 항의집회에 서울투본, 민의련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이대학보사에서 민간위탁반대투쟁 취재 오셨습니다.

▷ 서울대의예과 학생회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 9월 9일

▷ 98서울구제민중회의 보건의료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 9월 10일

▷ 국회의의를 방문하여 민원실장과 전문위원을 만났습니다.

-면담내용

공대위: 행정적으로 풀려질 문제가 아니다. 9월9일 당정협의내용은 무엇인가?

민원실장: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장, 차관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전문위원: 당정협의내용은 국민의료기본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가 우리당 입장이다.

▷ 한나라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자리에서 답을 듣지 못하고 오후에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가 당의 입장이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9월 12일**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반대투쟁기금마련 일일호프가 서울대치대학생식당에서 열렸습니다.

**9월 14일**

▷건국대의대 97학번 정경훈동지가 투쟁기금3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충청지역 의과대학 학생회 협의회에서 여름농활수행때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서명전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물인 241인의 서명지지를 받았습니다.  
▷의대생신문에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투쟁소식이 실렸습니다.  
▷김홍일의원(목포신안)에게 목포결핵병원이 국가기관으로 존속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9월 15일**

▷서울대의대, 치대에서 반찬을 가지고 지지방문오셨습니다.

**9월 16일**

▷전국 철거민 연합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서울대 간호대 학생회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학우들 106명의 서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건강세상열어가는 11대순천향의과대학에서 투쟁기금 21만원을 가지고 지지방문오셨습니다.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 연대치대지부에서 투쟁기금4만5천원을 가지고 지지방문오셨습니다.

**9월 18일**

▷전남대 의대에서 백서발간비용마련을 위한 주점을 열어 서울투본장이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9월 19일**

▷서울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개혁과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대학생회 이대지부에서 투쟁기금4만5천원을 주셨습니다.  
▷서울대간호대에서 겨울옷 2벌 주셨습니다.  
▷서울예전, 서울대의예과학생회, 적십자간호대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9월 22일**

▷명동성당측에서 25일까지 모든 농성단이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공권력이 들어오는 것

에 대해 아무런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위원장 비서관 이호형씨로부터 재정2팀 배국환과장을 소개받았습니다.  
▷서울대의대학생회를 방문하여 농성장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예전, 서의청, 서울대치대, 서울대간호대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9월 24일**

▷서울대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주최한 "98관악보건의료학교"에 참가해서 투쟁진행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98관악보건의료학교에서 투쟁기금5만원을 주셨습니다.  
▷적십자간호전문대, 서울대간호대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9월 25일**

▷덕성여자대학교 학보사에서 취재 오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1학년회에서 지난 일일주점 티켓판매대금중 3만원을 투쟁기금으로 주셨습니다.  
▷중앙대 간호대에서 지지방문오셨습니다.

**9월 26일**

▷서울대의대학생회동지들의 도움으로 농성장을 의대학생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서울역에서 열린 9.26민중대회에서 선전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개혁과 공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보건의료학생 투쟁본부에서 공대위와 함께 선전전을 해주셨습니다.

**9월 28일**

▷공대위(서울투본, 서의청)에서 기획예산위원회를 방문하여 재정1과장 배국환 과장님과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에 대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내용**

기획위: 민간위탁은 지난 2월18일 정개위에서 결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이다. 개별부처에서 정개위 결정사항을 반복하기는 어렵다. 민간위탁 이유는 공무원조직의 비효율성 때문이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치료비와 환자서비스 부분에 더 많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 하더라도 국립은 유지된다 운영에 관한 사항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공대위: 목포병원을 민간위탁 시킨 후 국가에서 관리 하겠다는 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기획위: 11월중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운영기준과 평가기준을 정하게 된다.

공대위: 민간위탁 시켜놓고 운영기준과 평가기준을 특별법으로 제시한 사례가 있었는가?

기획위: 없다. 처음이다.



공대위: 그렇다면 에이전시와 어떻게 다른가?

기획위: 에이전시는 기관장이 별정직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나 민간위탁은 전부 민간인 신분이다. 결국 신분상의 차이이다. 왜 환자들이 이 문제에 나서는지 모르겠다. 환자의 서비스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공대위: 병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결핵환자들이다 민간위탁 후 진료비상승과 결핵치료라는 특수목적병원의 위상이 실추된다는 것은 국민회의, 보건복지부등과 국가결핵관리위원회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기획위: 이문제의 해결은 행정자치부에 있다. 공무원직제령을 만들게 된다.

공대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운영비인가 용역비인가?

기획위: 용역비로 책정된 것으로 안다.

공대위: 결핵이 법정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기획위: 환자들이 걱정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에서 다 할 것이다.

공대위: 국립의료원은 에이전시로 하면서 목포병원은 왜 에이전시로 하지 않는가?

기획위: 국립의료원은 에이전시 후 매각될 것이다. 일반병원과 같아서 민영화 가능하다 하지만 결핵병원을 수익성문제로 당사자가 없다. 민영화는 안된다.

공대위: 목포결핵병원이 민간위탁 되면 마산결핵병원은 어떻게 하는가?

기획위: 마산병원도 민간위탁 시킬 것이다. 목포병원을 비 관료화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면담하고 돌아왔습니다.

#### 9월29일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교수님께서 백서에 들어갈 [국민복지의 상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셨습니다.

#### 10월3일- 10월6일

▷추석이었습니다.

#### 10월6일

▷서울대간호대에서 방명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 10월7일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들에게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투쟁경과 자료집 전달하였습니다.

▷서울대치대에서 겨울옷4벌을 가지고 지지방문오셨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개혁과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보건의료학생투쟁본부]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목포투본에 보냈습니다.

#### 10월 8일

▷공대위(서울투본, 민의련)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보건복지 상임위원에게 자료를 주고 왔습니다.

<국회의원실 방문결과>

김찬우 상임위원장 : 반드시 민간위탁을 상임위에서 철회시키겠다.

김홍신의원 보좌관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에 대해서는 공대위 입장과 다를 바 없다.

경제성만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 민영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특이나 공공의료기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홍일의원 보좌관 :행자부 차관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국민회의 보건복지상임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다.

이성재의원 보좌관 :국회청원을 받아준 국민회의 이성재의원과 면담을 요청했고 상임위 활동 전날을 잡아 연락주기로 보좌관과 이야기되었습니다.

국회방문 평가 :

의원회관 방문후 보건복지 상임위원의 거의가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다는것과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회기간에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국정감사대상이고 청원건등 두 가지 사안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을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방문에서 김찬우 상임위원장과 각 당에서 신망이 있는 국민회의 이성재의원과 한나라 김홍신의원등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공대위에서는 상임위 개시 날짜에 맞춰 국회앞 시위와 투쟁백서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10월9일

▷전남대의대에서 투쟁기금 6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명동거점선전전에 서울투본, 민의련,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에서 지지방문 오셨습니다.

#### 10월12일

▷이성재의원과 김홍신의원에 연락하여 국회보건상임위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①보건복지상임위 일정이 나온 것은 없으나 이번 주말쯤이면 확정된다.

②국정감사는 10월26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 10월13일

▷컴퓨터 통신작업이 서의청에서 서울의대로 바뀌었습니다.

▷명동선전에 서울투본이 참여했습니다.

▷국회앞시위때 쓸 피켓을 서울대의대, 치의예과에서 만들어주셨습니다.



### 10월14일

▷국회앞시위에 서울투본, 민의련, 서울대공대가 참여주셨습니다.  
민의련 김재광사무장께서 국립목포결핵병원 투쟁평가서를 보내주셨습니다.

### 10월15일

▷서울투본 농성단이 관악산등반을 하였습니다.  
▷명동선전전에 서울투본, 서울대의예과[돌팔이]이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서울대의예과[돌팔이]에서 투쟁기금 17만원을 주셨습니다.

### 10월16일

▷국회앞시위에 서울투본, 민의련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10월17일

▷서울대의대학생들과 대학로, 서울대병원앞, 의대후문등에서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의 올바른 개혁과 고용안정특별법제정을 위한 보건 의료학생투쟁본부]에서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반대, 민간위탁반대 집회를 대학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10월20일

▷국회앞 시위에 서울투본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10월21일

▷명동거점선전전에 서울투본, 민의련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10월22일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실에 연락하여 국회상임위일정과 민간위탁철회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보좌관께서 11월10일, 11일 대 정부질의가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이날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천새날청년회 [세상보기]행사에 초대받아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 10월23일

▷국회앞 시위에 서울투본과 민의련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민간위탁반대투쟁일지 정리하며

퇴원을 앞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겨우겨우 이어지는 호흡으로 투쟁에 동참해주었던 목포결핵병원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이 투쟁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가보는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환자들이 주체가 되어, 살고자 하는 그만큼의 의지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싸움이 승리한다는 것을 투쟁기간중 한 번도 의심한적이 없습니다. 전염병 치료와 예방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였고 환자는 치료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상식으로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식을 무너뜨린 정권과 자본에 저항하면서 국가의무의 이행여부도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지 않으면 한낱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50여일 이 넘도록 투쟁을 하면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이 투쟁이 정치인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져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거리로 내몰려했던 그 정치인들이 다시 민간위탁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청원과 탄원서, 질의서 등 정치인에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이땅에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 공공의료와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위해 투쟁하는 보건 의료단체와 보건 의료계열학생들속에서 최소한의 공공의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투쟁기간중 보건 의료학자, 의사, 행정기관, 정치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목포시의사회가 민간위탁 반대결의안을, 목포시의회는 민간위탁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민간위탁반대입장을 발표하였고, 민간위탁에 가장 앞장 섰던 기획예산위 조차도 에이전시(국가책임행정기관)를 발표하려다 정치적인 이유로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반대입장은 국민회의나 한나라당등 여야도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국회보건복지 상임위원장과 각 당에서 신망 받는 모든 의원들이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국회에서 우리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어 그 결과 자유로운 호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싶은 것은 미천한 우리 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건설되는가의 답이 이번이 투쟁의 성과일 이라는것입니다.

- 서울투본 -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투쟁 평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사무국장 김재광

## I 평가에 앞서

평가에 앞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의 사회, 경제, 정치 배경과 한국사회 보건 의료 배경을 바탕으로 평가의 근거와 지점을 찾으려 한다.

### 1) 정치·사회적 배경

97년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만들어 졌던 정부조직 개편위원회(이하 정개위)에서 99년 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결정했다.

결정의 배경(결정의 공식근거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한 정부 부처등도 정확히 갖고 있는 것 역시 없다.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얻어낼 수 밖에 없다.)에 있어 시기적으로 당시 IMF 금융구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극도의 긴축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으며 '작은정부' '효율적 정부'를 방향으로 했던 신정부의 목표 부합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언론은 특유의 호들갑을 떨고, 자본과 정권은 어색한 호흡을 맞추면서 정부 조직의 축소를 지상 과제화하고, 어떤 분야든 경제적 비효율은 근절해야 할 사회악으로 몰아 부쳤다. 그에 따른 대중적 측면 역시 소홀히 하지않았다.

이념적으로는 영미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70년대 이후의 자본의 자기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는 GATT가 WTO체제로 전화되는 형식과 내용의 외적 영향을 통해 90년대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신경영이라는 포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이글에서 굳이 장황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기에 간단히 언급한다면(영·미식과 독일식으로 신자유주의를 나눌 수 있으나 이글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으리라 보며, 주로 영·미식을 신자유주의라 칭하려 한다.)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실패했으며 따라서 경쟁과 효율에 따른 시장 운영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때문에 자본의 경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이윤창출이 가능한 곳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가 개입했던 공공부문에 자유

로운 경쟁 도입을 주장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권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 조직축소, 재벌의 봉건적 경영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각 부문의 개혁 위원회 설치 등을 시도했다(돌이켜보면 김대중정권과 국정지표라는 것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변화에 따르는 조급의 양보 조차 기득권층의 동의를 얻지 못함과 동시에 노동층의 저항으로 김영삼정권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그런데 김영삼정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용을 가진 김대중 정권은 앞서 지적한 시기와 교묘히 맞아 떨어지면서 이전의 정권과는 사뭇 다르게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조급의 꼬리만 보이며 움켜쥐고 있던 신자유주의는 '준비된' 리더와 외환위기를 통해 그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기관이 신자유주의 제단에 올려졌다.

### 2)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환경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앞서 지적한 문제와 더불어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환경도 한 몫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보건의료란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며 생활에서 유지하는데 무시할 문제는 아니나 절박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 특정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적으며 예외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건강은 개인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치료에 있어 개인부담을 당연시하고, 이것에 부당함을 항의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 상당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보건의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적 운명으로 체념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시민들의 의식이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의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권리 보다는 의무가 중요시 되었던 과거 파시즘적 개발형 경제구조에서 생계, 교육, 노후, 건강의 문제는 모두 개인과 가족이 해결하는 것으로 치부되었으며 지금 역시 지배적인 사회 의식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은 부차적 문제로 인식되기 쉬우며, 빈곤할수록 생활고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삶의 질을 운운하고,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경제적으로 풍요한 자들에게는 건강이 값나가는 상품이 되고, 빈곤자에게는 여전히 부차적이고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 권리에 대해 항의하고 요구하지 않는다.(사실 '않는다'라기 보다는 개인부담이

당연시 되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와 같은 환경속에서 정세적 시기와 맞물려 급기야 관료들은 '왜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 '왜 수익성이 없는 곳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가?' '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달라야 하는가?' 신자유주의 사고를 하게된다. 왜냐하면 건강은 개인의 몫이고, 지금 시대는 긴축과 경쟁과 효율이 선이고, 비효율은 악이니까

이렇듯 보건의료에 대한 천박한 의식과 환경은 관료와 대중을 끝없이 건강을 사치나 혹은 부차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악순환은 반복된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이 악순환의 하나의 과정이었다.

## 2. 투쟁 평가

### 1) 성격과 의의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반대 투쟁은 원진레이온으로 대표되는 직업병 투쟁과 병원노동조합이 보여주었던 의료민주화 투쟁과 또다른 차원의 민중건강권 확보 투쟁으로 다음의 성격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신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첫번째 공공의료기관 축소 반대 투쟁이었다. 공공의료기관에 있어 수익성에 기초한 공공의료기관의 축소 방침에 맞서 첫번째 포문을 연 투쟁이다. 2월 18일 정개위 발표후 바로 투쟁에 임했으며, 하루 쉽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장기간의 투쟁에 따라 안 찾아 간곳이 없고, 가능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민간위탁의 부당함, 건강권 보장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선전했다. 이과정에서 사실상 관련부처들은 뒤늦게 공여지책의 정당성을 만들기 바쁘거나, 주무부처와 관련부처 간의 협조나 이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음을 폭로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밝혀냄으로써, 관련부처 스스로를 반성케 하고, 신자유주의 보건의료 정책에 저항함으로써 일정한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환자들이 주체로 서는 자발적 투쟁이었다.

만족할 만큼의 조건은 아니나 병원의 필요성을 몸으로 느끼는 환자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다. 이것은 이와 유사한 97년 국립의료원의 투쟁과 노조가 조직된 국립대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과 뚜렷하게 다른점을 가지는 부분이다. 의료 현실상 항상 수동적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환자의 입장에서, 강제퇴원과 감당하기 어려운 피로와 싸우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투쟁의 설득력을 얻어냈으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 주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투쟁이다.

셋째,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사회 책임을 각인시키는 투쟁이었다.

투쟁을 목포 한지역의 문제나 결핵이라는 국한된 질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책임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주요한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이나 제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시민에게 국가의 책임과 공공의료의 의의를 환기 시킴으로써 지역적 한계와 국한된 질병을 뛰어 넘어 건강권확보 투쟁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 2) 조직적인 면에서

투쟁 이전 장기간의 격리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들은 무료한 병원생활에 활기와 서로의

의견교환 그리고 병원에 개선사항 건의등을 위해 신문을 만드는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이후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정개위의 발표가 있고나서 기존의 자치기구를 환자비상대책위로 구성하고 목포지역의 여론형성을 위해 목포지역에 공대위를 결성하여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기민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서명을 통한 국회청원, 수차례의 지역언론 보도, 지방의회 출마자 전원에게 민간위탁 반대의견을 받아내는 등 지역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함과 동시에 광주지역의 보건의료 학생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하여 공동대책위를 건설하고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투쟁을 하였다.

목포와 광주 그리고 서울을 아우르는 공대위 활동속에서 다음의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목포, 광주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공대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과 단일병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으며, 명동성당을 근거하여 중앙부처와 중앙당을 중심으로 집회와 면담 등의 활동은 효과적이었으나, 지역활동의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지역간의 공공투쟁을 마련하지 못했다.

둘째, 조직의 크기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히 컸다. 이는 많은 수의 단체 참가는 있었으나 재정적인 기여도가 취약하여 몇몇 특정한 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그 취약성을 심화 시켰다.

셋째, 이럼에도 환자비대위의 지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해 이완된 공대위를 추스리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 공대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투쟁주체의 성실한 활동이라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수 있으나, 예초의 조직구도가 무력화되어, 사실상 공대위 주체가 스스로를 보조적 입장으로 한정지움으로써 활동을 제약하고 성실성을 상실했다. 이점은 투쟁이 장기화된 한 요인기도 하다.

### 3) 내용적인 면에서

목포결핵병원의 투쟁은 자신의 문제(민간위탁) 자각으로 비롯된 당사자적 요구가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문제가 전체 민중의 건강권 확보라는 폭넓은 인식과 사명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다. 자연발생적 요구가 의식적인 사명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민중투쟁의 전형이다.

초기의 투쟁에서 결핵이 무엇인지, 한국의 결핵실태, 타국의 결핵실태 등을 조사하고 결핵관리 문제점과 취약성을 환자 스스로가 밝혀내기 시작했다 또한 민간위탁이 무엇이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감정만이 아닌 합리적으로 밝혀내려 했다. 자칫 결핵문제로 국한려하기도 했으나, 투쟁이 경과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제적 폭로와 김대중정권의 취약한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하게 되었다. 중국에는 자신의 삶과 밀접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보건의료의 문제를 자신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게 되었으며, 건강은 결코 개인의 문제이거나 부차적인 아닌 삶의 직접적 문제임을 내용화 했다.

어떠한 투쟁이건 간에 자신의 문제를 사회화하지 못하면 눈길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







1.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1. 결핵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

1.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라!

1.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14기 참의료 실현의 신화창조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서울대 의예과 보건의료학회 돌팔이

1. 우리 나라의 결핵실태 - OECD 회원국 중 1위

우리 나라 결핵 보급율은 58%, 환자 수는 43만여 명에 달하고(100명중 1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간 4000여명으로서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전염병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결핵관리수준은 중국이나 태국보다도 떨어져 아프리카보다도 못하다.

2. 우리 나라의 결핵관리

우리 나라의 국가적 결핵 관리체계는 크게 보건소, 결핵협회와 국립 결핵병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결핵병원은 초기 치료에서 실패한 환자들과 난치성 중환자의 구호 및 치료를 담당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동부권은 국립마산결핵병원이 담당하고,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를 포괄하는 우리 나라 서부권 결핵 환자의 치료를 담당해왔다. 즉, 단 2개의 병원이 전국의 중증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관리 소홀로 인해 결핵에 관련된 재정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실제 치료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충분히 결핵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목포결핵병원은 결핵 관리에 있어서, 서부권을 포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3. 김대중 정부의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기능의 민영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다.

민간 위탁이 제기된 이유를 살펴보면,

- ①. 국립결핵병원을 적자만 쌓이게 하는 효과 없는 국가 기관으로 판단함
- ②. 결핵병원이 국가 보건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 ③.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입지조건을 노린 목포지역 인사의 위탁운영 민원이 제기됨.

4. 우리는 왜 민영화에 반대하는가

국민들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와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권은 경제성의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민들의 권리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보듯이 정부는 열악한 보건복지정책을 자본의 논리로써 더욱 퇴보시키고 있다.

목포결핵병원 민영화는 단지 목포라는 지역에 있는 한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공의료 부문의 민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건강마저 자본의 논리에 좌우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중 생존권 위협의 또다른 형태이다.

위에 민영화가 제기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해보겠다.

①. 현재의 적자운영은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제도 정비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IMF를 방자하여, 국민 보건복지적인 차원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여 국립 결핵병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간병원이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수익성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에서 경제성 때문에 진료비를 인상할 경우, 목포병원 입원환자의 43%가 현재 진료비 월 10000원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만약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결핵의 특성상 진료비를 높일 수 없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결핵환자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동안 결핵병원에서 담당하던 낙도 민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결핵 환자 발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현재 우리 나라의 결핵실태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국가 보건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결핵은 우리 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0위안에 드는 유일한 전염병으로 노숙자가 증가하고 민중의 생활 조건이 악화되면서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 환자 조기발견, 진단, 장기간의 치료와 철저한 추적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제도와 정책이 치료에서 방치된 1명의 난치성 결핵환자가 1년에 10-20명의 난치성 결핵환자를 유발할 수 있다.



③'.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국가 보건 정책이 특정 이익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정책 결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5. 목포결핵병원 비대위 성립 이후의 투쟁 경과와 의의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목포결핵병원을 99년 중에 민간위탁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래 입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 전남 지역 학생들, 신문사와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3월 서울상경투쟁이 시작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투쟁의 과정에서 서울 투쟁본부에 계시는 두 분은 목포결핵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셨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대표를 만나주지 않고, 외면하고만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민중건강권을 위협하려는 김대중정부에 맞서는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재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중생존권을 쟁취하려는 투쟁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민영화 반대 투쟁은 결핵병원입원 환자들 주체가 되어 자신과 민중의 건강권을 쟁취하려는 데에서 더욱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포결핵병원의 민영화 반대 투쟁에,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민중의 건강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명동성당에 있는 서울투쟁본부에 지지 방문갑시다!!

◆매주 월요일에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 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서명운동합니다!! (특히, 화, 목, 토에 학생들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의료의 몸짓으로”,  
민중의에 보건의료학회 들/팔/이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저지하고  
민중건강권 쟁취하자!!!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경제위기, 그것은 이제 1998년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필수적 표현이다. 무차별적인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이윤율의 하락, 관치금융을 통해 재벌의 살찌우기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부패한 정경유착 구조는 바로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이었으며, 독점재벌과 썩은 정치세력야말로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경제위기의 책임은 우리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오로지 '재벌 살리기'를 위한 구조조정은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낳았으며,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소위 중산층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높은 실업률은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속에서 우리 민중의 생활과 건강은 더욱 더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로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여 민중의 건강을 지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보건의료를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를 강화해 전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김대중 정부의 공약은 경제성과 재산성이라는 기준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재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시키려는 방침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결핵왕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결핵이 만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국민 100명당 1명이 결핵환자이며, 우리 나라 국민의 10대 사망원인중 하나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과 책임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경제위기로 인해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결핵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결핵병원을 민간위탁시키려는 방침은 오히려 결핵퇴치정책의 포기나 방기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환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할 경우 최고 43배나 오르게 될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은 결핵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국가 결핵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건강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나서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건강할 권리가 무시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는 상황에 맞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을 철회시키고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고자 비록 환자의 몫으로 지금까지 싸워온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에 오늘 발족하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철회,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그리고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민중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1998년 6월 29일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대표자 회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은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 결핵 환자 수는 43만 명에 달하며 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4천여 명으로써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우리 나라 10대 사망원인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 전환함과 동시에 폐쇄됨에 따라 마산과 목포만이 남아 있으며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법정 3종 전염병인 결핵 예방치료 사업을 국가가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의 국민층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치료 중단을 방조하는 것이며 결핵의 사회적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강화는 현시기 더욱 더 요구된다.

개인의 건강을 개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우리사회에서 경제침체는 바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장기간 관찰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더욱 피해가 심한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이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가 곧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는 철학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절한 예방과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앞서 밝힌 '경쟁과 효율'이라는 다분히 상업적인 논리에 따라 열악한 보건의료로 실태를 무시한 채 지방의료원의 책임경영(실 내용은 민간위탁과 거의 흡사)도입, 국립의료시설의 민영화, 민간위탁등을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이 '경쟁과 효율'이라는 상업적 논리에 적용 받는 것을 반대한다.

오히려 지금의 시기는 더욱 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국가보건복지정책을 포기하는 행위다.
-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은 경제성 문제로 논의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
- 국립목포병원을 위사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은 오히려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예산증액에 노력해야 한다.

1998년 6월 25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대표자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과 건강연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전국병원노조연맹, 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평등사회를 민중의료연합

**정부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적자 운영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98.2.18



발표)은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매우 위험스런 조치로 철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뒤늦게나마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오랜 세월동안 결핵의 공포에 시달려 왔던 우리는 한 두해 전 결핵 발병율(국민 전체 대비 1%이상 43만명)과 치사율(매년 4천명이상 사망)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의 심경으로 이를 지켜보았으며 경제의 외형적 성장 속에 가려진 국민의 보건의료실태를 통탄한 바 있다.

그런데 IMF 경제난 속에서 새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결핵의 확산 방지책을 기대하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조치일 뿐만 아니라 결핵 확산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매우 위험스런 조치이다.

민간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진료비가 턱없이 뛰어 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상황에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비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민간위탁 방침은 결핵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전가시키고 질병의 확산을 낳을 수 있는 지극히 잘못된 조치인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경제논리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특히 결핵은 그 전염성과 치사율이 가히 공포스런 것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퇴치를 위해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마산과 목포 두 곳에 설치된 국립 결핵 병원 1차 치료에 실패한 2차 치료 환자의 격리 치료 병원인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체하지 말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민간위탁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국가재정 사정이 문제라면 고금리 소득자의 세금 징수율을 높이거나 오늘의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는 재벌의 재산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일부 정치인의 재산을 환수해서 마련하기 바란다.

우리는 국립 결핵 병원 뿐만 아니라 공영기업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눈길로 이를 지켜 보고 있다. 정부의 방침 재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1998. 7. 10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울연합

### 목포국립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전국 학생회장단

공 · 동 · 성 · 명 · 서

우리는 정부 당국이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목포국립결핵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실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핵은 전염병

으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질환에 속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또한 43만 명에 이르는 결핵환자 수와 유병율이 1.3%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발표만 보더라도 결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유병율이 1%가 넘는 현실은 태국, 중국 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목포국립결핵병원은 마산과 더불어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 국립결핵병원으로 서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 입원환자의 70%가 서남부 도서지역 주민이라는 점 등 목포국립결핵병원이 갖는 막대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부당국의 민간위탁 시도는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결핵이 재발이 잘 되는 병이고 재발이 잦은 난치 환자의 경우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핵병원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농어촌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입원치료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정부가 말하는 국립병원 적자해소를 위한 효율화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간위탁 방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을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상은 어떤 의미도 없다. 정부당국이 국민대중의 절대절명한 보건복지의 문제를 단순 시장경제논리로 대체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심각한 국가 경영철학 부재를 드러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의 학생회장단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입원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국가보건복지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결핵 퇴치사업을 위해서도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셋째, 국가의 복지정책은 경제 논리로 논의될 사항이 결코 아니다.

넷째,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경제 결핵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핵병원에서 내몰리는 것을 반대한다.

동아대 의대 학생회, 서남대 의대 학생회, 전남대 치대 학생회  
강원대 의대 학생회, 전남대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  
전남대 자연대 학생회, 전남대 약대 학생회, 전남대 공대 학생회  
전남대 농대 학생회, 전남대 예술대 학생회, 전남대 가정대 학생회  
전남대 사회대 학생회, 전남대 인문대 학생회, 전남대 사범대 학생회  
전남대 법대 학생회, 조선대 약대 학생회, 계명대 의대 학생회



덕성여대 약대 학생회, 서울대 의대 학생회, 한양대 의대 학생회  
연세대 의대 학생회, 순천향 의대 학생회, 이화여대 의대 학생회  
전남대 의대 학생회, 서울대 의예과 학생회

1998년 7월 2일

###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철회되어야 한다

####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요즘 명동성당은 가관이다. 세상이 어지럽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울수록 명동성당에는 천막이 하나씩 늘어난다. 최근 명동성당에는 민주노총, 실업자연맹, 한총련, 한려대학교 교수농성단, 목포결핵병원 환자비상대책위 등 이상 5개의 천막이 쳐있다.

이중 목포결핵병원의 경우는 아주 특징적이다. 병원 직원도 아니고 병원 의료진도 아닌 환자들이 직접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명동성당까지 올라와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목포결핵병원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이하 정개위)에서 민간위탁방침이 결정되었고 그날 이후 환자들은 지금까지 목포와 서울에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개위의 결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설명은 목포결핵병원이 공무원 조직이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며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 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결핵병원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첫째, 결핵정책은 국가주도로 더욱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 100명당 1명이 결핵환자이다(43만명).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망원인중 유일한 전염병이다. 더욱이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결핵이 확산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턱없이 부족한 결핵치료기관을 민간위탁 시키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이 되면 치료비가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핵환자들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적 능력도 매우 떨어진다. 이 때문에 목포결핵환자의 43%가 국가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 주고 있다.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면 인상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결핵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으며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곧 결핵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셋째, 민

간위탁이 될 경우 우려스러운 또 다른 점은 결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포기되는 경우이다. 민간위탁이 될 경우 수탁자는 불가피하게 이윤을 남겨야만 한다. 그런데 결핵환자들만을 치료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치료비를 비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핵환자들만을 치료해

서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 이럴 경우 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부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결핵병원으로 역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결핵은 전염병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다. 콜레라 환자가 전국에서 5명만 발생해도 호들갑을 떨면서도 이미 43만명의 환자가 있는 결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오히려 적은 편인 것 같다. 물론 전염속도나 병의 치명도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결핵을 전염병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대중 정부는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결핵퇴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핵퇴치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목포결핵병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다.]

지난 6월 17일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환자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15일째 농성중이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올해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꾸리고 목포지역에서 그 부당함을 반대서명, 국회청원, 세계결핵의 날 행사장 집회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더욱더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명동성당 농성을 결행한 것이다.

정부측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위탁경영의 이유를 정부기구축소와 인력축소, 그리고 채산성 차원에서 적자만 쌓이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이유는 정부관료가 국민건강 대한 투자를 트러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수는 공식적으로 43만명에 달하며(유병률 1.3%)연간 결핵으로 사망한 수도 4천여명에 달하며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우리나라의 10대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국립목포결핵병원 한달 병원비 약1만원)이어서 민간병원을이용할 처지가 못된다. 때문에 마산과 목포에 그나마 단 두곳있는 실정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환자들의 치료중절을 사실상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법정전염병인 결핵관리를 포기하는 행위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국립병원의 효율성을 최근 들어 부쩍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료기관의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의문이 남는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병원의 이득을 남기는 것이 효율인가? 아니면 질 좋은 의료를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환자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인가? 필자 자신은 후자가 올바른 의료기관의 효율이라 생각하며, 효율을 위한 개혁 역시 후자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는다.

때문에 법정 전염병인 결핵 사업 마저 이윤이라는 상업적 논리를 내세워 민간위탁하려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며 국민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 논리 앞에서 내팽겨치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을 감출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오히려 더욱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픈 것이 죄가 되버리는 세대를 바로 잡아 진정한 '국민의 정부'되어야 할 것이다.

98.7.1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사무국장 김재광

## 성명서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목포국립결핵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실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핵은 전염병으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질환에 속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또한 43만명에 이르는 결핵환자수와 유병율이 1.3%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발표만 보더라도 결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유병율이 1%가 넘는 현실은 태국, 중국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목포국립결핵병원은 마산과 더불어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 국립병원으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 입원환자의 70%가 서남부 도서지역 주민이라는 점등 목포국립결핵병원이 갖는 막대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부당국의 민간위탁 문제는 즉각 재고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정부당국이 국민대중들의 절대적절한 보건복지의 문제를 단순 시장경제논리로 대입시킨다면 이는 심각한 국가 경영철학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지지부진하거나 후퇴의 양상까지 보이는 일련의 상황에서 영세환자비율이 가장 높고 왜곡된 사회인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의 결핵환자들을 방기한다면 이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입원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와 요구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첫째,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 국가보건복지정책에 역행되는 행위이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진단, 치료 등의 관리는 국가의 전염병관리 시책 중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민간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경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립결핵병원은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 및 난치성 결핵환자의 입원치료시설로서 결핵환자 대부분이 영세환(국비환자 80%) 자로 장기입원시 경제적 여건상 일반 병·의원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결핵병원 기능강화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둘째, 결핵 퇴치사업 육성상 민간위탁 운영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현재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익성에 기반한 정부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결핵전문치료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 기준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 셋째, 결핵과 같은 전염성질병은 경제성 문제로 논의될 사항이 결코 아니다.

민간위탁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지원의 축소는 필연적이며 그간의 진행경과를 되돌아 보아도 민간위탁은 곧 병원의 민영화를 예상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의료사업자는 경영수지개선을 빌미로 일반진료과목개설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국민보건의료복지에 쓰여야 할 세금이 특정민간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은 세금따로 의료비따로 식의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 1만원정도의 입원 치료비는 40여만원이상으로 오를 것이 예상되며, 이는 영세한 입원환자는 물론이고 수십만에 이르는 결핵환자들의 치료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보건위생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 넷째, 이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 대폭적인 축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역할은 단순히 입원환자들을 치료하는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각종 결핵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사업은 물론이고 무료건강검진과 예방활동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의 보건복지사업의 중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역할을 크게 증대 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시책이 시행될 수행기관으로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중요성을 더욱 살려 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정부당국은 민간위탁 후에도 예산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실로 주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소위 경영개선을 빌미로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면서 국가예산으로 그 뒷받침을 해준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한번 호소하고 촉구하고자 한다.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라면 사안의 경중과 특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당국의 신중한 처사를 요청한다. 시장경제의 논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국가차원에서 지키고 오히려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말의 실천이다.

1998년 3월 17일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목포민주청년회, 목포노동자회,목포지구총학생회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목포분회, 전교조 목포지회,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비상대책위원회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을 반대하는 목포지역인사 100인 선언

1998년 4월 15일

우리는 정부당국이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실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핵은 전염병으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질환에 속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또한 43만명에 이르는 결핵환자수와 유병율이 1.3%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발표만 보더라도 결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유병율이 1%가 넘는 현실은 태국, 중국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립목포결핵병원은 마산과 더불어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 국립병원으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 입원환자의 70%가 서남부 도서지역 주민이라는 점등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갖는 막대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부당국의 민간위탁 문제는 즉각 재고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정부당국이 국민대중들의 절대적절한 보건복지의 문제를 단순 시장경제논리로 대입시킨다면 이는 심각한 국가 경영철학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지지부진하거나 후퇴의 양상까지 보이는 일련의 상황에서 영세환자비율이 가장 높고 왜곡된 사회인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의 결핵환자들을 방기한다면 이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입원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와 요구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첫째,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국가보건복지정책에 역행되는 행위이다.
- 둘째, 결핵 퇴치사업 육성상 민간위탁 운영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 셋째, 결핵과 같은 전염성질병은 경제성 문제로 논의될 사항이 결코 아니다.
- 넷째, 이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대폭적인 축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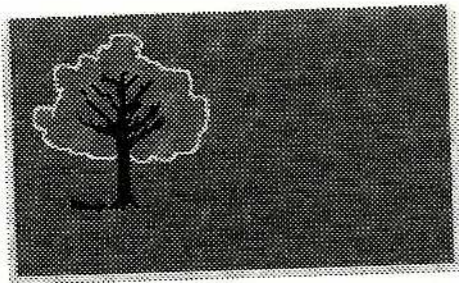
## 서명자 일동

★노 동/노성호(목포MBC노동조합위원장),박선희(성골롬반병원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송관엽(한라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이은영(성골롬반병원노동조합위원장),차용만(전교조목포지회지회장),최기중(전교조전남지부부지부장)★사회/강대백(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공동회장),강성휘(목민협지역활동국장),김광현(전교조목포지회부지회장),김남중(목포노동자회사무국장),김재기(목포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김정봉(목포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종현(목포YMCA신협전무),김창용(목포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탁(목포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김은숙(목포YWCA일하는여성의집관장),박광웅(목민협공동의장),박기철(목포노동자회장),박심배(목민협공동의장),박재희(목포민주청년회장),배종범(목민협지역활동위원장),서병권(목포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손성근(목포민주청년회부회장),신대운(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공동대표),여인두(목민협사무국장),윤소하(목민협집행위원장),이상열(목포YMCA

이사장.변호사),윤현수(목포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이영주(목포민주청년회사무국장),조상현(목포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최순재(목포노동청년연대회장),허용만(목포노동청년연대사무국장)배상훈(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장)★종교/강만동(삼일교회담임목사),고장열(휘광성결교회담임목사),민Patrick Murphy(대성동성당신부),박갑수(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사무국장),서상인(소망교회담임목사)심해석(용당교회담임목사),유갑준(복음교회담임목사),이기봉(화육교회담임목사),이기형(중앙교회담임목사),이문희(해양오염감시개발센터소장·목사),이준형(북교동성당신부),임기준(원로목사),정형은(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공동회장),황차규(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공동회장)★언론/김세환(내일신문기자),최정삼(목포신문기자)★의료/고삼수(약사)김영현(목포시의사회장),김정길(목포기독병원원장),김지환(상아치과원장),문익주(인수당한약방원장),박용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목포분회장),백동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목포분회전회장),서한태(환경과건강연구소이사장·의사),안선엽(약사)오진숙(독일의원피부과의사),이원(하당우리들의의원원장),여성숙(목포의원원장),윤종수(윤종수신경외과원장),이금희(신아약국약사),오혜경(바다약국약사),전병음(독일의원소아과의사),전판석(목포기독병원신경외과),조생구(의사),최태욱(의사)★학계/권신원(목포전문대학장),김인만(목포전문대학경영학과교수),김정민(목포대교수),박경갑(목포전문대학교수),박현(목포전문대학교수),서용석(목포대학행정학과교수),신충룡(기계공고교사),양승희(교사),오병균(목포대교수),이희석(목포여고교장),전성열(목포전문대교수),정일현(목포대교수),정승기(대불공대교수),최일환(문태고등학교상담실장)★시민/김부영(사업),김상문(종원건설대표),김선주(원일건설대표),이국관(사업),이재인(환경감시단장),이종선(실로암경양식대표)★학생/김상미(성신간호전문대총학생회부회장)김찬우(목포대동아리연합회장),박석원(성신간호전문대총학생회장),박을설(목포전문대동아리연합회장),백동규(목포대동아리연합회부회장),서대현(목포대총학생회부회장),이석주(목포대총학생회장),이인주(목포대총여학생회부회장),이지희(목포전문대동아리연합회부회장),임선영(목포대총여학생회장)★정치/강찬배(목포시의원),김대중(목포시의원) - 이상 100인







# 자료모음

## 청원서

수신 : 김대중 대통령님 귀하  
 발신 :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 배상훈외 218명

제목 : '99년중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 철회요청

살아야한다. 그리운 가족과 정든 일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저희들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 입원환자들입니다.

저희 국립목포결핵병원은 1962년 사회봉사단체에서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 개원해 운영하던 중 1970년 목포시에서 시립기관인 '목포결핵병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핵퇴치사업은 지방단체의 능력으로도 수행하기가 불가하여 1983년 국가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확대개편하고 1990년 대통령공약 사업에 의해 360병상의 현대식병원으로 신축하여 매년 호남지역 및 인근도서지역 7만여 결핵환자의 치료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환자들은 완치 후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열심히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18일 정개위의 [국립목포결핵병원은 '99'년 도중 민간위탁한다]는 결정은 우리 입원환자의 숨통을 조이는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97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바 있는 <98년 국립결핵병원 기능강화>정책에 정면배치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공중보건정책인 결핵사업이 갈팡질팡 일관성없이, 단지 신정부의 인원감축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목포결핵병원 환자의 70%가 인근 도서지역민임을 감안하지 않은 즉, 결핵발

병의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책상머리에서 국가결핵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작고 효율적인 정부을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의 축소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비대해진 관료사회를 재정비해 남는 인력과 재정이 사회복지로 재투자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230여 입원환자들은 40만 결핵환자의 치료기관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쳐 버린 정개위의 결정에 그저 황당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개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첫째 목포시 의사회의 정기총회 결의문 "결핵치료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볼 때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보건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에 철회되어야한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정부조직법」 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정부사업인 특수목적병원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공공성(공익성) 상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결핵왕국이며 후진국에서나 나타나는 20, 30대의 결핵발병율이 줄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97년 국립공주결핵병원이 폐쇄됨에 따라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우리나라 서부권(서울,경기,충청,전라,제주) 결핵환자의 전문치료기관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230여 입원환자와 전국의 40만 결핵환자는 이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단연코 반대하며 이번 기회에 국가의 결핵인식 재고와 결핵치료체계 전반의 혁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첨부 : 1.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서명지 1부.

1998년 3월 23일

청원자 대표: 배상훈



## 청 원 서

청원인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5번지  
국립목포결핵병원 2병동 203호실  
성 명 : 배 상 훈 외 3만1천2백30명  
주민등록번호 : 620907-1149129

제 목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방침 철회건

### 취 지

1.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비록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 모두들 힘든 상황이지만 연두빛 엷은 푸름이 온 대지를 감싸고 있는 4월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약한 저회 환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건강인권이 우리사회에 올바른 상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에 저회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인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다는 '99년중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43만 결핵환자를 대신해 국회 보사위에 응급구조를 요청합니다.

2. 우리나라는 현재 43만명 (전인구의 1%)의 결핵환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OECD 국가중 1위이며, 전염병으로는 유일하게 사망순위 10위안에 결핵이 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핵관리가 후진국수준인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국가책임의 결핵관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민간위탁시 위탁자의 경영논리에 의해 결핵전문병원이 모든 과목의 다양화로 전환할 것이 분명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 (MRI, 초음파) 등을 통해 우리 환자들의 입원치료비가 인상되어 경제력을 상실한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입원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우리사회에 결핵 확산을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정 3종 전염병인 결핵을 전문치료하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민간위탁은 국립결핵병원의 기능과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 그리고 결핵환자의 경제력 부재를 고려해볼 때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므로 43만 결핵환자를 대표하여 청원하오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서부권환자들의 마지막 치료 기관입니다.

국정에 바쁘신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

절기상으로 폭우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늦봄조차 지나고 여름이 국립목포결핵병원앞 임성들판까지 성큼 다가왔습니다. 들판에는 모내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난 가을 추수후 남은 벼밀등에서 푸른 새잎이 돌아나 마침 지나는 바람에 연두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아우성입니다.

들판의 아우성속에서 살아남고자하는 강한 생명력을 배웁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는 저희는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5번지에 위치한 국립목포결핵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잠시 병원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회 병원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직장에서 밀려나고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때가 되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우울하고 어두운 생활만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열심히 치료받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은 병에서 벗어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회병원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이 모두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자신까지도 결핵으로 고생하는 3병동에 임 완이라는 28세 남자환자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결핵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부모님 중 한 분과 임 완씨는 결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핵의 조기발견과 예방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또한 결핵의 가족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신혼 초인데 장래에 대한 걱정이 공포라고 고백합니다.

5병동(여자병동)에는 여중 1, 2학년 환자들 3명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고 두 학생이 남아 있습니다. 둘다 이제 중학교 2학년, 16살입니다. 콩새 미경이는 조금만 무리하면 코피를 흘리는데 거리 서명전을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코피가 나서 저희들 모두의 가슴에 아련 기억을 남겨 놓았습니다.

점팔계 경미는 툭툭하게 생겼습니다. 밀린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모범생입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 숨이 턱까지 차있었는데 조금씩 뛰는 것을 보니 이제 다 나은 듯 합니다. 투약이 끝나는 여름방학쯤이면 학교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흑산도로 퇴원하신 2병동 이삼돌 할아버지는 고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인천에서 건설노동일을 하는 큰 아들분이 부정기적으로 얼굴을 보이고 가는데, 울초 할아버지께 얼마간의 용돈을 드린 뒤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님에게 전화걸려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전 재산 동전 3000원을 위탁반대기금으로 써달라고, 병원이 없어져 아들이 못찾으면 어떡하냐고... 배식실에서 3000원짜리 돼지머리를 삶아 잡수시던 모습을 뵈는 기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악에 비해서 결핵은 여론을 환기시키는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사망을 합친 것만큼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들이 결핵을 중요한 안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30만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는데도 어린이 살리기 단체에서조차 결핵사업에 우선권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에이즈 관련병 환자의 3분의1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에이즈운동에서 중요한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예방할 수 있는 병으로 죽은 사람의 26%를 차지 하고 있는데도 개발단체에서 중요 안전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결핵관리단 고치아라타 단장 - 94년세계결핵비상을 선포하며- )

요즘의 결핵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에서 벌어지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결핵을 우습게 알고 그저 잘 먹으면 낫는 병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결핵사업을 우선사업 대상에서 밀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결핵이 확산 일로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상태는 후진국형인 생산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나라에 43만 환자가 있고 매년 4천여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지난 2월18일 정부조직개편심의회에서 '99년중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이 결정되면서 오전, 오후 안정시간과 하루 네차례 투약으로 짜여진 투병생활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위탁방침은 병원환자 전체에게 가치관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왔고 마침내 자구책으로 환자비상대책위원회의라는 것을 구성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위탁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설마하며 반신반의하던 환자들이 각종 언론매체에 병원위탁 소식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가중되는 불안감에 체념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결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개위에서 정부조직 감축을 구상했을때 비대해진 관료사회를 효율화 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에 공감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복지분야의 축소로 다가선다면 이는 어느 누구도 좌시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 복지의 축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룡으로 불리는 행정공무원사회를 재편해, 그래서 남게 되는 인력과 재정을 우리사회의 복지확대로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환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복지공간인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

저희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활동을 하면서 병원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가의무사업으로 해야하는 결핵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관한 것이었습

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결핵을 나병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구에서는 결핵치료를 위한 격리요법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은 1962년 4월28일 한, 노협회와 캐나다 유니테리안봉사회 공동으로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결핵환자 치료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경제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1970년 4월1일 목포아동결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 기관인 “목포결핵병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핵퇴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83년 1월1일 국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국립 전염병 치료시설로 흡수하여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확대개편하고 1990년 10월20일 병원현대화 계획에 따라 대지 2만여평에 연건평 3,303평, 360병상규모 신축병원으로 준공(대통령 공약사업)되어 의료인력 57명, 기타행정지원 33명으로 구성된 결핵 전문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연 인원 7만여 명의 호남지역 및 도서벽지 결핵환자의 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3개 결핵병원(공주,목포,마산)중 1997년 공주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전환과 동시에 폐쇄됨에 따라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우리나라 서부권(서울,경기,충청,전라,제주)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국가기관 병원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운영의 주체가 민간에서 관할시로 다시 국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결핵사업의 특수성과 맞물려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핵병원 민간위탁은 결핵치료를 위한 특수목적병원으로서의 위치와 공공성을 잃어버려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불행한 결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저희는 결핵사업의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보았던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AIDS 와 이민의 증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결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는 공적서비스의 저하 즉 정부·주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핵증가에 위기감을 갖은 미국의 정부와 의료계가 DOTS (직접 감시하의 단기화학요법)의 보급 등 강력한 결핵대책을 실시한 결과 최근 결핵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이 가져올 심각한 공공성 훼손으로 인해 중국에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일반병원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우선으로 인한 결핵치료사업 수행이 소홀해질 개연성이 큼니다. 민간위탁 경영의 주목적은 경제성 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핵환자의 진료비(현재:월 1만원)로는 채산성이 없어 경영수지개선의 일환으로 일반진료과목을 개설하여 결핵환자치료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저희 환자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결핵관리는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등이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직접 결핵관리사업을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건복지부 방역과 1998년 3월 27일 배상훈의 질의에 대한 회신 中]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개위의 민간위탁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칭)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운영 검토반을 구성하여 등 검토반에서 타당성 여부, 비용, 효과분석, 민간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학계, 관련단체,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등을 중심으로 향후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운영여부를 결정" - 보건증진국 1998년 3월 민간위탁결정(안)에 따른경과보고 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 집단에서 결핵사업 특성상 민간위탁운영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특히 목포시의사회는 정기총회 결의문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었고 행정관련 공무원들은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며 법정 3종 전염병인 결핵을 전문 치료하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들은 의사협회 결의문과 행정상의 문제점을 보면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앞서 말한 두가지 이유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병원의 지역별 입원 분포를 살펴보면 입원환자의 70%이상이 전남인근 도서지역 출신이며, 나머지 30%가 서울,인천, 경기, 충청, 제주지역 환자들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국립목포결핵병원은 동부권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마산결핵병원과 더불어 서부권 환자의 치료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당국은 섬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98년부터 낙도이동순회 진료반의 무료건강검진과 건강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국립기관으로의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는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진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료기간이 단기 7개월, 장기 18개월로 이 기간동안 환자들은 노동력을 상실해 어떠한 경제적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 기혼자의 경우는 가족의 부양문제가 이중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혼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치료도중 취업을 위해 퇴원했다가 다시 재발되어 다제내성 상태로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경제적 상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는 결핵 치료에 있어 적정가격의 약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일반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치료를 중도에 포기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3병동에 입원중인 이태형씨(남자/ 35세) 경우 광주기독병원에서 지난 1월7일부터 2월 23일까지 38일간 입원비가 97만1천2백원이 나왔고, 5병동 김연신씨(여자/ 56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3달부터 4월 초까지 서울중앙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해 무려 68만원이 청구되어 과중한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국립병원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월 50여만원을 병원비로 낼 수 있는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월 1만원의 치료비를 내고 있는 환자들에게 민간위탁은 죽

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민간병원에서의 높은 진료비를 부담할 경제능력이 있었다면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단순히 공무원 수 줄이기나, 경제적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43만 결핵환자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부디 우리환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살피주시어 국립목포결핵병원에서 별 걱정없이 치료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4월 22일

청원인 : 배상훈

서울시정부를 건설하며  
서울시민들을 위한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대한 반격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하는지 아무도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는 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호흡을 잃어버린 43만 결핵환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매년 4000명이 죽어 가는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맞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자유로운 호흡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한다)는 서울투쟁본부(이하 '투본'이라한다)를 건설하고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민간위탁반대가 구걸이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밝혀내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서울상경투쟁 전개합니다.

목포투쟁 120일째 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기획예산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을 기정사실화 하려하는 의도를 밝힌 것이 상경투쟁의 원인인 만큼 이번 투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목포권을 중심으로 투쟁을 벌인 지 120일을 맞으며 우리는 선전활동이 목포지역 이외는 되지 않고 있다는 지역적 한계를 인식하고 결핵병원민간위탁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목포를 뛰어 넘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임을 알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것입니다.

지난 2월18일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소식을 접했을 때 모두가 '설마' 했습니다.



사회와 격리된 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민간이양에 관한 무성한 소문과 불확실해진 미래에 대한 우리 환자들의 작은 소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부조직개편을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놀란 것은 결핵병원을 민간 위탁하겠다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적 위반해석은 고사하고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라는 민간위탁의 당연함을 자신 있게 제기하는 정부를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97년 보건복지부백서를 통해 98년국립결핵병원의 기능강화를 공표한 것을 손바닥 뒤엎듯 뒤집어 버린것입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은 결핵이 전염병으로는 유일한 10대 사망원인 순위에 들어가고, OECD 가입국중 결핵발병률·유병율이 1위인 점을 망각한 처사이며, 결핵관리 수준이 이웃한 중국이나 태국보다 뒤떨어져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결핵의 실태를 완전히 무시한 정책이며 결정입니다.

정부가 IMF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추락해 어느 때보다도 결핵발병의 조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최소한의 예방사업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의 '결핵의 국가관리 권고'와 고치아라타 단장의 '세계결핵비상 선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 지침에 따른 1) 기획예산위원회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내년도 운영비용역비로 전환발표와 2)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운영방안 제출요구, 3)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공개적인 민간위탁반대 입장발표 거부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이러한 행위를 43만 결핵 환자에 대한 학살의 준비과정으로 보고있습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이 민간 위탁되면 진료비 인상으로 노동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상실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탁자가 수익중대를 위해 일반진료과목을 신설해 돈이 되는 일반환자들을 입원시킴으로서 결핵환자들은 입지가 좁아져 결국 병원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포기라는 비난과 새로운 '국민정부식 적산불하'라는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5년후 김대중정부가 진정 '국민의 정부'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IMF를 빙자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쇠퇴된 결핵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사회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 시킨다면 IMF자본 독재정권이라는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오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대위는 목포·서울투쟁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총반격을 시작합니다.

1998년 6월15일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배상훈

## 정세글

### IMF 이후에도 민중생존권은 지켜야 한다!

IMF 세계자본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움켜쥐고 총체적인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자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권리가 없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전세기는 금세기 마지막의 축제라는 프랑스 월드컵의 열풍이 휩쓸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은 월드컵을 빌미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IMF 구호체제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에서도 민중의 생존권을 향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즈음에 우리에게 있어 50년만의 정권교체는 무슨 의미이며, 김대중 정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것인가라는 문제는 생존권이라는 기본권과 맞물려 작은 혼란으로 다가온다.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기 몇번을 강조해도 싫지 않는 "소외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 국민정부를 자처하고,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정부답게 개혁과 민주주의 의지를 불태웠다.

정권이 출범한지 4달이 지난 지금, 신정부가 자신들의 준비된 의지만큼 국민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되짚어 보면, 김대중 정부가 반민중적이고 수구세력화 되어간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권초기인 3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한달간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도원동 계개발지구 강제철거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전개될 국민정부의 민중탄압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명시된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는 철거민을 내몰기 위해 정부는 골리앗 탑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는 사람마저 불에 태우는 등의 상상을 초월한 폭력을 방조하고 목인했다.

김대중 정부가 반민중적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는,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5.1절 집회의 폭력적 대응과 노동자, 학생연대의 엄단! 발표였다. 이는 이전 역대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믿었던 구석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400만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들의 참혹한 생활이 뉴스거리가 아닌 일상화된 우리의 사회를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요구와 정리해고 반대는 생존이 달린 정당한 요구이다.

LG 경제연구소가 밝힌 '우리나라의 중장기 실업전망' 보고서를 보면 IMF 체제에서 저성장, 고실업의 구조가 만성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제위기하에서 노동자의 고통분담은 필수적이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투쟁이 외자유치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문제삼았다.

이러한 폭력적인 진압은,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해체와 총수의 재산환수 조치, 전체예산의



25%에 달하는 국방비 축소등 정부예산의 생산적인 분배는 생각지도 않고 달려라고는 만져보지도 못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국민들의 과소비때문"이라며 경제위기를 대다수 국민들의 소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후 발생하는 자생적인 투쟁을 무력으로 막겠다는 공권력의 남용이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기업의 무리한 외국자본유입과 부채경영,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과 이탈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조기대응 실패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말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또한 정리해고제 도입, 공공지출의 삭감, 정부부문의 축소, 사회복지제도 축소로 현 상황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진영이 김대중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투쟁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는 노동문제 뿐만아니라 정부조직축소를 빌미로한 국민보건복지사업의 축소와도 그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진영의 당면 투쟁을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획득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1930년 초반 미국의 노동자들이 투쟁했던 [실질임금의 삭감없는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보, 노동공유]를 기억했으면 한다. 자본의 무제한적인 해고의 자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대응이라 여겨진다.

무엇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대응 방법인가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대응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앞서 김대중정부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말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국면이 어느 한가지 부문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전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결핵사망율과 유병율 1위이고 인근의 일본, 중국, 태국보다도 낙후된 결핵관리에 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결핵정책의 전 반적인 개혁과 법령정비를 뒤로 한 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자본논리로 국립목포결핵병원같은 특수목적 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을 보면서 김대중 정부가 '국민정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 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IMF !

이제 시작이다.

제국주의 패권 전쟁이었던 세계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 그리고 20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던 이념적 대립을 제3차대전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일대 격돌은 세계 제4차대전이다. IMF 이후에도 민중의 생존권은 지켜야 한다.

1998년 6월 16일  
비대위 대표 배상훈

# WE ARE SACRIFIED !

Is there any disease to underestimate among all the different diseases existing in the world?

A part for AIDS that is known as the most dangerous disease of our time, Tuberculosis also still remain one of the dangerous disease in the world. Although some succesful findings of the way to treat and to prevent the T.B, it's still the disease that exterminate thousand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at's why many countries, even the poorest ones, possess some big hospitals to take care of tuberculosis which contagion is easier and faster than AIDS.

There are about 170 millions tuberculosis patients in the whole world.

we can find about 430,000 of them in South Korea; about 1% of the population, most of them are between 20 to 30 years old, and the annual ratio of mortality is about 4000 patients.

Two years before, S. Korea could count 3 big hospitals for internal diseases, expecially tuberculosis but since the National Kongju T.B hospital was turned into a psychological hospital last year, there still remain only two of them. One in Masan and another one in Mokp'o for all the 430,000 Korean T.B patients.

On February 18, 1998, the government have decided to turn again the National Mokp'o T.B hospital into a private business by next year. That's not too bad but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patients in the National Mokp'o T.B hospital come from the Kongju's hospital which is now a psychological hospital. If such a decision can be realized, what will then happen to all the T.B patients in the Mokp'o T.B hospital?

where will they be transferred again?

Moreover, 80% of those patients are very poor, most of them don't have families. They have great pain to pay even the ₩10,000 of the hospital monthly fee, many of them receive free treatment due to their social situations.

The T.B treatment period is very long. It varies between 7 to 9 months for regular treatment and about 12 to 18 months for a re-treatment. During all this time, the patient is bound not to work, but he is obliged to pay his treatment fee.

hat seems very hard to some of them who think that a suicide is a good way for them to solve those problems, as was the case last month for one of the patients who unsuccessfully tried to kill himself by a knife.

If the National Mokp'o T.B hospital is turn into a private hospital by next year, all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main only with one T.B hospital.

It's possible that one can stay home and take T.B medecines but it seems like at home a patient don't really realize the situation of his physical condition than if he had stayed in the



hospital and he may also be the cause of contamination to others in short time.

Also, nobody in Korea ignores the way private hospital are expensive and many can't afford to go there. If a T.B patient has great pain to pay ₩10,000 in a national hospital, how much will it be hard for him to pay ₩420,000 for a monthly treatment in a private hospital?

As you can read in the above lines, all these are the reasons why we, patients of the National Mokp'o T.B hospital, on this occasion of the universal tuberculosis'day, want to express our opposition to that decision through the demonstration.

We think that our government ignores or knows nothing about T.B, that's why they lead a bad politic on that.

We want things to change, we want the government to review its decision about turning the Mokp'o T.B hospital into a private one.

We beg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the korean association of tuberculosis, the W.H.O. and all the T.B patients around the world to back our demonstration.

Isn't this a kind of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morning of the universal tuberculosis'day

1998. 3. 24

Mokp'o National T.B patients.

[http : // dream. nungkul. co. kr / ~ mokpotbc](http://dream.nungkul.co.kr/~mokpotbc)



##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께 올립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국가 안위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은 하신지요.

신임 장관으로서 IMF경제 위기속에서도 국민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살고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은 어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저는 이곳 국립목포결핵병원 206동에 입원중인 36살인 환자 주치균입니다.

당뇨병과 결핵, 천식등으로 십여년간을 대한민국 좋다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최근에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십여년간 치료하는 동안에 많은 돈을 치료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광주기독교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 있는 방이 없다는 이유로 2인실을 사용토록 해서 보름(15일)동안 병원비가 98만원이나 나오고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병실이 없어 일주일에 158만원씩이나 입원비를 계산하고 한달 약값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서도 30만원정도가 나와서 결국 이곳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병원 시설이나 모든 것이 국가가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복지시설에 신경을 써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려해주신 보건복지부에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병원이 적자운영과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인에 위탁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셨을때는 결핵 환자들을 위해 적자와 그 정도 투자를 정책상 감수하시고 병원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병원이 민간인에 위탁된다면 한달에 최소한 40-50만원씩되는 병원비를 내고 치료할 환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치료하기가 힘들어 이 병원에 찾아온 분들입니다. 국내에 마지막 남은 마산과 목포국립결핵병원을 장관님과 보사부위원들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장관님!

이곳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환자들입니다.

1년에서 길면 10년, 아니 죽을때까지 약을 먹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핵은 3종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아무리 국가가 IMF로 경제가 어렵게 됐다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전염병 예방사업과 43만 결핵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인에 위탁한다는 것은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철회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43만 결핵 환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관철하시어 꼭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결핵을 완치하는데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43만 결핵환자들의 머리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장관님이 돼 주시면 이 은혜 백골난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군이 되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하 보사위원회,국회등 높으신 분들과 잘 협의사셔서 꼭 저희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이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1998년 5월 11일 주치균



### 결핵병원 없애면 갑자기 나라가 좋아지나요?

국회보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해 있는 16살에 정경미라고 합니다.

지금 밖에 날씨는 화창하고 새들도 지저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따뜻한 봄날, 새해 기쁜 소식을 들어야할 계절에 저희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예정이란 말입니다.

:

병원비대위원들은 민간위탁을 백지화시키지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른다면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저도 서명을 받으러 다니긴 했는데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퇴원하니깐 신경을 안써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저 혼자만은 아닙니다. 43만 명이라는 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핵사망률, 유병율1위인 우리나라가 결핵병원을 더 만들진 못할망정 없앤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병원까지 없애면 마산 한 곳에 이 많은 환자가 다들어 갈수도 없습니다. 입원해야할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결국 길거리나 집에서 고통받으며 죽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균을 퍼뜨리며 다니고 그렇게되면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도 결핵에 걸릴 수 있죠.

어른들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결핵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어 돈 끊어 내려는 거 같아요. 그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어른들이 돈 무서운지 모르고 사치낭비를 일삼아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남겨둔 보배라고 하지만 이 IMF 대통령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다 돈 버려두고 사치낭비 도박같은거해서 버린 돈을 왜 우리까지 손해를 봐가며 지켜야하는지 모르겠군요. 마땅히 이걸 그 사람들 뺏아주세요.

이런 우리나라를 망쳐 놓은 그 사람들인데 왜 죄없는 우리국민들이 뒤집어 써야죠. 그건 한 핏줄이니까 우리도 도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 할 일은 하질 말았어야죠. 전 아직 어려서 어른들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핵병원을 없앤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어른들이 반성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저 이외에도 10대가 2명더 있어요. 아직 당신들이 말하는 우리나라를 지키지 말아먹을지는 모르지만 꿈나무들입니다. 저도 아직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소녀예요. 어

린것이 뭐야냐고 하시겠지만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힘을 쓰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읽는 분들 중에 결핵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어찌면 결려본적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장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이 어떨지도 모르진 않겠죠.

이런 민간위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민간위탁 백지화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14일 정 경 미

## 98 보건복지부 개편 사항

### 기능보강

-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국립공주 정신병원을 신설한다.(162명 충원)

### 기능 재편

- 현행보건·의정·약정·식품등 대상별 사업중심별 조직을 보건정책·보건증진·보건자원관리등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한다.

- 식품정책국·,약정국의 정책기능만 본부에 존치하고 민·허가등 집행기능은 대폭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이관한다.

### 기능감축

- 결핵 및 나병환자수 감소추세에 따라 국립공주결핵병원 정원(82명)을 폐지하고,국립소록도병원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감축56명)

### 민간위탁

- '98년도중 국립보건원의 국가고시관리기능(정원12명)을 민간위탁 한다.
- '99년도중 국립목포결핵병원(정원90명)과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사회복지사 양성기능을 민간위탁한다.

### 책임행정기관화

- '99년도중 국립의료원(정원801명)의 책임행정기관화를 추진한다.
- 국립보건원의 국가고시관리기능을 98년도중 민간위탁하고 기획지원부(3급) 및 보건고시과는 폐지한다.
- 국립보건원 훈련부(3급)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3급)을 '99년도중 통합하여 보건복지연수원으로 개편하고,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사회복지사 양성 및 교육기능은 민간위탁한다.

\* 4급에는 3·4급복수직을, 5급에는 4·5급복수직을 포함

\* 연구직은 상당직급에 포함

\* △ : 감축

### 소속기관

-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지방식품의약품청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한다.

- 국립결핵병원중 공주병원(2급)은 폐지하고, 목포병원(3급)은 '99년도중 민간위탁하며, 마산병원(2급)은 인력을 감축조정한다.

- 국립공주정신병원(2급)을 신설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은 하부기구는 현행을 유지하되, 인력을 감축조정한다.



- 국립의료원은 인력을 감축하고, '99년도중 책임경영행정기관화를 추진한다.

소속기관별 조정내역

구분	현정원	증감	지급별							비고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기능직		
합계	3,654	△973	△2	△3	△16	△58	△633	△261		
식품의약품안전본부	362	△362	△2	-	△10	△40	△229	△81	-	
지방식품의약품청	349	△349	-	△2	△4	△10	△300	△33	-	
국립공주결핵병원	82	△82	-	△1	-	△5	△44	△32	-	
국립목포결핵병원	90	△90	-	-	△1	△5	△51	△33	'99조치	
국립마산결핵병원	159	△30	-	-	-	-	△20	△10		
국립소록도병원	221	△56	-	-	-	-	-	△56	'99조치 (△30)	
국립보건원기획지원부	39	△12	-	-	△1	△1	△7	△3	'98조치	
국립보건원호원부	24	△13	-	-	△1	△1	△8	△3	'99조치	
국립사회복지연구소	52	△31	-	-	-	-	-	-	'99조치	
국립의료원	801	△45	-	-	-	△3	△25	△17	-	
국립공주정신병원	0	+162	-	+1	-	+8	+76	+77	-	
행정지원인력감축	-	△65	-	-	-	-	-	△65	-	
기타소속기관	1,475	-	-	-	-	-	-	-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민중건강권쟁취